

---

#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R&D 투자, 제도,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지속 확대해 민·관 협력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도화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적·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31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R&D 투자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2012년, 15위 → 2021년,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2012년, 77.8% → 2020년, 80.1%)

윤석열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정체의 원인이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R&D 기획·투자·제도 등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40여 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

#### 🎯 제도혁신 | 연구자 입장에서 개혁, 도전과 혁신을 견인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
-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특례 도입)
-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 혁신적·도전적 R&D 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
-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
-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 🏠 투자혁신 |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긴 안목에서 투자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 R&D 투자 확대**

-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
- 분산·파편화된 R&D사업(1,200여 개) 통합·재편
-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대전환
-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
-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과,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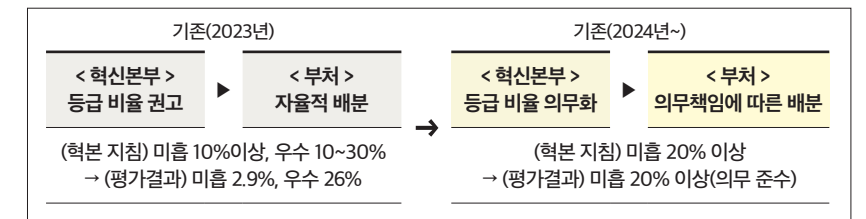
###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R&D 투자방향 전환을 실시했고, R&D를 R&D답게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초의 법제화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R&D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를 R&D답게 재정비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을 마련(2023년 8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와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상대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평가 등급 비율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사업평가를 실시할 때 미흡 등급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부처 자체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 R&D 상대평가 개편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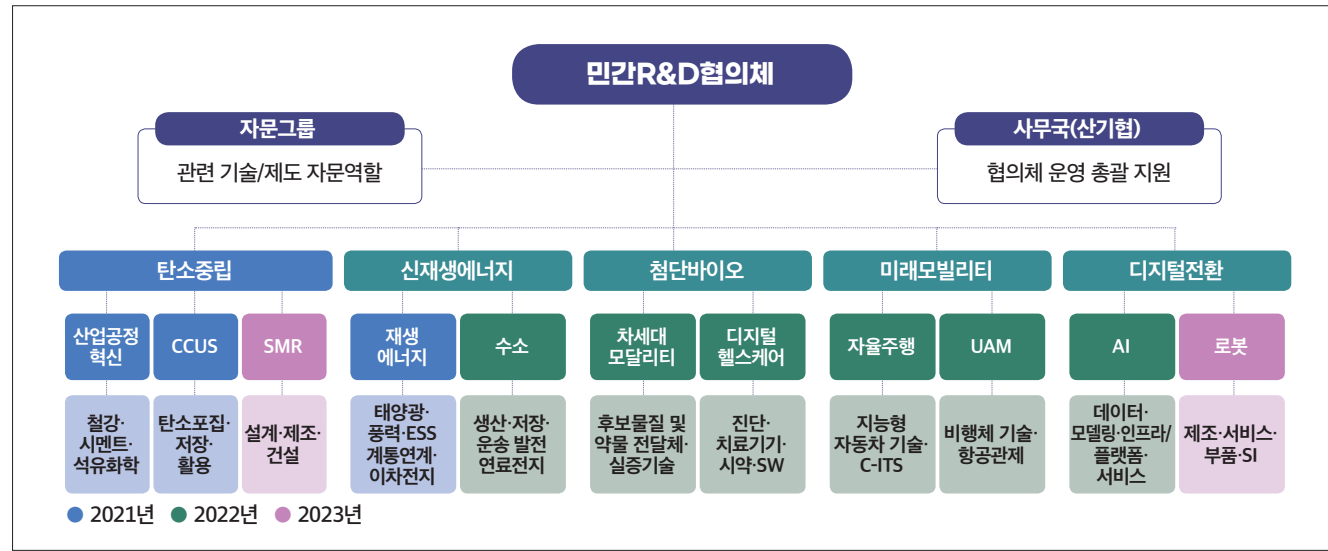
그리고, 사업이 적시 추진되도록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2건\*에 대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해 기존 조사 대비 2.5개월 단축된 4.5개월 내로 완료했습니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2023-1차 접수, 조사기간 2023.4~8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2023-2차 접수, 조사기간 2023.7~11월)

###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정부 R&D의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 민간 R&D 협의체 현황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민·관 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인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개 분과 120여 개 기업에서 2023년에는 11개 분과 170여 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협의체에서 제안한 민·관 협력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의견 등을 담은 기술분야별 전략보고서를 발간·공유하고, 각 부처는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정부 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민간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계·금속 분야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기업의 R&D 세액공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R&D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2023년 연구개발용 과세감면 대상품목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R&D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딥테크 유니콘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 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및 확산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총 32개 기관 약 1만 5,000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해 81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

< IRIS 1.0과 2.0의 주요 차이점 >

구분	IRIS 1.0(통합중심)	IRIS 2.0(활용중심)
핵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통합*을 통한 창구 일원화</li> <li>*과제·성과, 연구자, 평가위원, 연구비집행 정보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데이터 기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정책 지원</li> </ul>
부처·전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 등 일부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li> <li>평가위원 풀 통합</li> <li>3책5공 사후관리 가능</li> <li>요약정보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li> <li>자격, 실적 정보 중심의 행정자료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과제 수행, 평가 이력 등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확대</li> <li>AI 기반 평가위원 추천·매칭</li> <li>3책5공 위반 사전 방지</li> <li>원문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li> <li>연구비 집행내역, 취업 연계 정보 등으로 행정자료 연계 확대</li> </ul>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공고 및 원스톱 과제신청</li> <li>범부처 과제정보 접근 가능</li> <li>연구자 정보(기본·실적) 통합</li> <li>기관별 중복서류 제출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 관심 정보* 자동 추천</li> <li>*관심 공고, 기술분야별 이슈 현황 등</li> <li>행정정보* 자동입력(Paperless)</li> <li>*기업 재정·신용 정보 등 자격요건/논문, 특허, 수행 과제, 평가결과 등 연구실적 등</li> </ul>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통합(IRIS 1.0)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R&D관리체계(IRIS 2.0) 전환으로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기관의 국가 R&D 참여, 국제공동연구의 동시수행 과제 수 완화, 영리 기관의 기관부담금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등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해 국외 수해정보 관리,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연구보안 안내서 제공 등으로 연구보안 체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과건비 사용 범위 확대,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등록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제도 폐지 등 연구현장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점 이상으로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고 혁신형 SMR, 6G, K-클라우드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 및 뇌과학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양자과학기술 선도전략 마련 등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지원에 착수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교류를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경쟁 속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 < 국가전략기술 개요 >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제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작년 4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2월 까지 12대 기술분야별 국가임무 및 기술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토대로 R&D사업 체계정비·육성방안 마련, 융복합형 기술육성 정책 발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 민·관 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R&D 중에서 국가적으로 전략성과 대표성이 있고, 5~7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민·관이 함께 집중 지원·관리하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총 63건(2023년 상반기 41건, 2023년 하반기 22건)의 후보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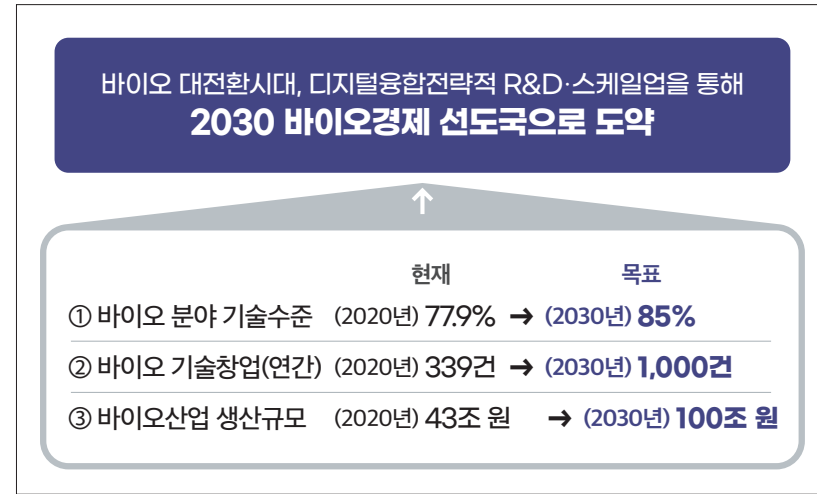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2023년 착수), 6G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2024년 착수) 등 선정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프로젝트별로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착수한 이후에는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향후 10년 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서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으며,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영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계 최고, 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4년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해 양자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와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 포함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학·연 기술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딥사이언스 기업에 필요한 장기·인내자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딥사이언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확산·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도전적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해 실증특례 신청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속확인 제도,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시행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규제 특례 신청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실증특례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규제특례를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사·동일한 과제 신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146개의 연구

기관, 9,300개의 기업이 실증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KPS-GPS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일본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을 체결하고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KPS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초고 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야별 혁신 지원과 지원 접근성 강화, 기술강국 도약, 생태계 기반 확충의 4대 중점방향 및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6G 상용화를 위한 R&D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KPS 개발·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무인이동체 신규 R&D 기획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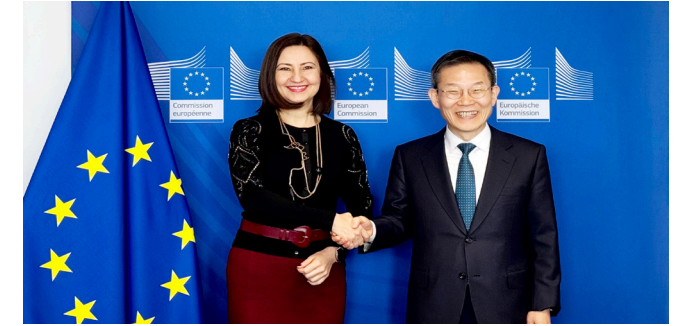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으로 과학기술·디지털 전 분야에 대해 한미 간 굳건한 기술동맹 관계를 확인하고, EU,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를 심화해나간 해였습니다.

우선 미국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설립을 합의하고, 양자과학기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성명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23년 12월에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해 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연구 추진,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양국 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보유국 중심의 국제적 블록화 경향 속에서, 유럽 강국과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2024년 3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023.5.19)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2024.3.25)

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 연구자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EU로부터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과학기술·ICT 분야의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영국과는 2023년 11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주, 기초과학, 양자과학기술 등 11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이 포함된 ‘한영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수연구자 194명을 신규 유치해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유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국내외 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킹 및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세부 정책을 수립해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창의성·도전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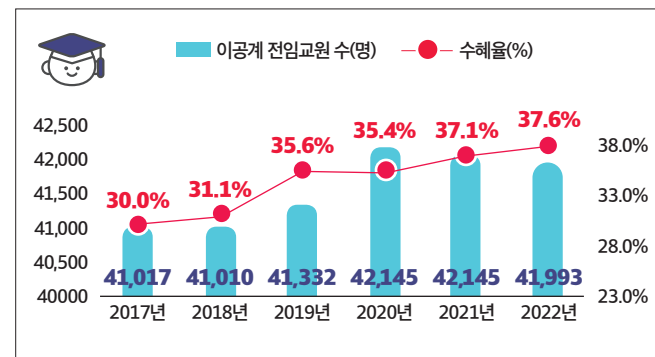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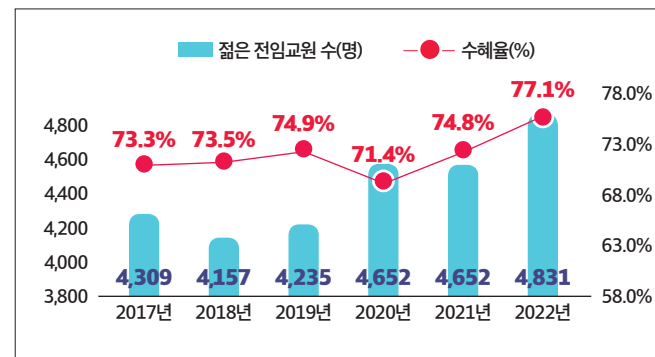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조 58억 원 수준에서 2024년 2조 63억 원까지 확대했고,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해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해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핵심 인프라 등이 갖춰진 연구실을 조기에 구축해 생애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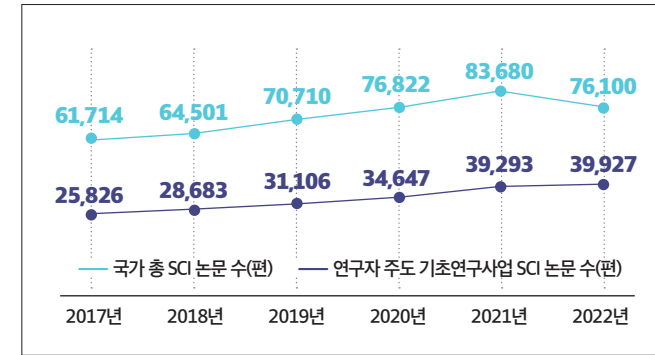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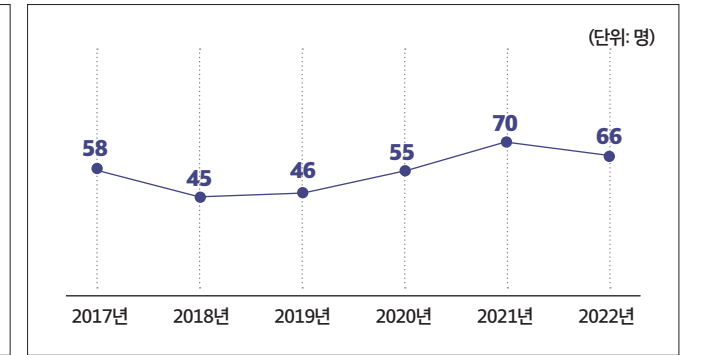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 국내 HCR 선정자 수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지원기간 1년, 최대 연 5억 원 연구비 지원)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의 수는 역대 최대 수준인 66명(분야 중복제외 시 65명)으로, 이 중 48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입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 10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대 10년, 연 2억 원 연구비 지원)의 신규과제 지원을 2023년 대비 2배 확대\*했습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15개 → (2024년) 30개

아울러, 글로벌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리더 연구, 선도 연구센터 등 수월성이 높은 일부 기초연구를 글로벌 R&D 형태로 전환하며, 국가 간 수요에 기반해 매칭 형태로 추진하는 ‘글로벌 매칭형’ 사업도 신설해 지원합니다.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2023년 신설해 대폭 확대\*했습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50개 → (2024년) 190개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36,85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11,019
점유율(B/A)	25.2%	25.5%	27.1%	29.9%



또한, 2024년에는 소규모지만 수월성이 높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신설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과학 전 분야에 29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이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에미랩) 준공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학회, 간담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이며, 변화된 기초연구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사업 및 추진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구소 체계로 집적해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 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지원팀 구성, 연구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십,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이공계 학부생의 학업 물입 지원을 위해 2023년 총 8,062명의 대학생에게 약 51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장학생 성장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선배와의 만남)를 통해 이공계 최우수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우수(이공계)장학생의 경우 2023년부터 과거 1회성 멘토링을 다회성 온·오프라인 멘토링 클래스로 개선해 성장지원의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최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해 잠재력 있는 우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견학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해 대학원 대통령국가장학금을 신설(2024년 30억 원, 120명)했습니다. 이로써 학·석·박사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산업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 기존 학사급(매년 25명) 인재와 함께 석사급(매년 25명) 인재도 추가로 선발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 대상으로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학사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연수 및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산업체(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합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3년 기준 총 1,334명 참여(석·박사 1,050명, 학사 284명)

\*\* 2023년 10명 선발 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해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자·반도체 분야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선정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에는 가입자수가 1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만 8,575명 → 2023년 3만 7,152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3년 8,658명

##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범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SW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및 AI·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 및 민간주도 생태계를 구축했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생성형AI 등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AI·디지털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극복과 경제 재도약뿐만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디지털 각축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디지털 잠재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규범 정립, 전산업·지역 확산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SW, 인재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AI·디지털 강국,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성과 창출 본격화

정부는 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의 체계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범부처 디지털 정책 협력체계인 ‘디지털 전략반’을 운영해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과기정통부)’, ‘산업 AI 내재화 전략(2023년 1월, 산업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2023년 4월, 디플정 위원회)’ 등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여 개의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AI반도체 등 6대 혁신기술 개발에 8,000억 원 투자, 디지털 기술기업 대상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6,000억 원 규모의 ICT 중소·벤처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 예산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23개 정부기관이 101개 정책과제에 본격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AI 지원 수혜기업은 AI 서비스 개발기간 4.6개월 단축, AI 기반 제품·서비스 품질 42.3%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7개 의료기관에 의료 AI 솔루션(닥터앤서)을 도입하고 54개 병의원에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를 7만여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80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1호 사례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정(2023년 6월)하는 등 2024년 3월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누적 21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72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 < 국가우수 성장지원 멘토링 클래스 >



아울러,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력복귀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 퇴직인력 증가 등 인구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석·박사급 과학기술인 약 7만여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DB를 확대(2022년 1,676명 → 2023년 2,027명)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수 연구인력 활동 분야 추가 발굴을 위한 ‘중장년 과기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 대체인력지원 사례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분석실 200주임

- 농·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분석하고 유효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분석실 200주임은 둘째 임신과 함께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할 타 기관에서 첫째 출산과 함께 퇴사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 둘째를 계획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휴직 후 동일 기관에 복직해 농식품 잔류 농약 분석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



한편, 정부는 생성형 AI 발전 등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전략 2024년도 실행계획을 수립(2023년 9월)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9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습니다. 청년세대(MZ) 간담회(2023년 7월), 기업 CEO 간담회(2023년 9월) 등 총 14번의 공론화, OECD, UN, 미국 등 10개국 이상의 총 400여 개의 조문을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조문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표한 디지털 규범들과는 달리 AI뿐 아니라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AI 안전·신뢰를 넘어 격차 해소, 혁신 등 번영과 인류 후생 증진 등의 차별화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GDC 포럼(2023년 10월)에서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 인사들에게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2023년 11월)을 공동 개최하는 등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초일류 국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2023~2025년)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AI반도체 최대 민·관 협력 창구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11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기업간담회 및 분과회의 등을 총 32회 개최, 국내 AI 반도체 공급자 및 수요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AI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해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AI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을 수립(2024년 4월)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해 AI 반도체 설계 및 SW 연구, 산·학 연계,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AI반도체대학원 3개교를 개원했습니다.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2024.1.19)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2024.4.4)

또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2023년 4월), '초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2023년 9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4 CES와 MWC 등을 통해 2024년 AI 일상화 시대가 개막됐음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하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2024 CES 혁신상 수상기업들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제5차 인공지능최고위전략대회를 개최(2024년 1월)했습니다.

아울러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과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 현장의 AI 수요를 확인하는 총 7차례의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2024년 1월~3월)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먼저 AI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전체적 방향을 조율할 민·관 협력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구성·출범(2024년 4월)했으며,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2024년 4월) 등을 상정·논의했습니다. 특히 4월 9일에는 반도체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를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G3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AI기반 혁신강국 도약, 경제 회복과 국민 삶의 질·행복 향상을 위해 국가 청사진 수립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 공공·민간데이터의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22년 9월 출범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부위원 30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2023년 1월)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초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4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2022.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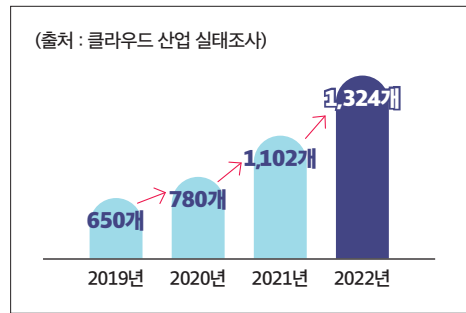


2023년 4월), 품질인증 기관 지정(3개, 2023년 7월) 등 데이터 거래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또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2023년 9월), 데이터 거래사 양성(162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초거대 AI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분야 학습용 데이터(452종)를 구축하고, 금융, 교통, 통신 등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공공 데이터의 편리한 검색·활용 및 데이터 공급·수요·중개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데이터산업인프라' 구축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SW)산업의 질적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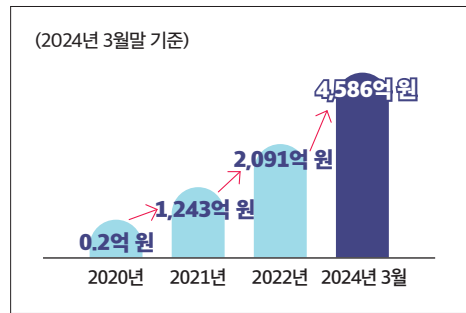
< 국내 SaaS 기업 수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 35.7% 향상, IT 자원 구축비용 36.5%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 국내 SaaS 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들이 간편한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운영하고,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선도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창출하고, K-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SaaS 전환 가속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년)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누적) >



또한,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 도입 근거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민간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했습니다.

###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마침내 2024년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한계들과 新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디지털 혁신 글로벌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ICT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 목표의 실용성이 명확한 임무지향·문제 해결형 R&D와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R&D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도 과기정통부의 ICT R&D 총 투자 규모는 1조 1,668억 원으로 ICT R&D 전반의 규모를 효율화했으며,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과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분야 R&D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습니다.

###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으로 2023년 5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는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 >

분과	발표 내용
데이터·SI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갑을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성과들을 공유·확산하고 업계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디지털 경쟁 속에서 세계 AI·디지털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AI·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인 ‘K-Network 2030 전략’ 마련(2023년 2월)하고, 6G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6G 신규예타(4,407억 원) 통과(2023년 8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2023년 9월)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2023년 3월)했고,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2023년 6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997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심화시대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6G, 오픈랜, 양자,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의 미래 네트워크 비전을 담은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하고(2023년 2월),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인 6G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4~2028년, 총 4,407억 원)해 향후 글로벌 6G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2023년 8월), 미국 등 주요국과의 6G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6G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2023년 6개국 10개 과제). 또한 6G 국제표준의 토대가 되는 ITU의 ‘6G 비전’ 프레임워크 개발에 의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파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3.8.24)

수가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등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미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는 등 선도국과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023년 9월)을 마련하고, 관련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오픈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장비·소프트웨어 R&D 사업에 착수(2023년 4월)하는 한편,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점인 ‘오픈랜 인터스트리 얼라이언스(ORIA)’도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85개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5G 공동망’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4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과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전 주기적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디지털서비스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안전을 디지털 기술로 제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2022년 7월)’을 발표한 이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 등 정규교육을 확대하고, 시큐리티 아카데미·S-개발자, 화이트햇스쿨 등 특화교육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멘토와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 세계적인 해킹대회인



‘DEFCON CTF’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통령 주재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년 10월)’을 통해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로 성장 중인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과를 글로벌 진출로 연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2023년 9월에 수립했으며,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2023년 7월에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보안패러다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과 융합한 정보보호 신사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모델을 초광역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스마트오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테스트베드 등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10.12)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3.7.12)

## 디지털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이후 국민은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유형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이 선택한 인증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할 보안규격과 평가 세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으나,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2023년 10월부터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AI·SW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고,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거점,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중소·벤처기업의 전파 활용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방 디지털 혁신 체계를 구축·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과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28GHz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음 5G를 활용한 롯데월드 실감형 체험 서비스를 2024년 4월 개소하는 등 로봇, 공장, 의료, 안전, 물류,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구현이 가능한 이음 5G의 전국적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2023년 1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2023년 7월)’을 마련했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새로 선정(2024년 1월)되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세 차례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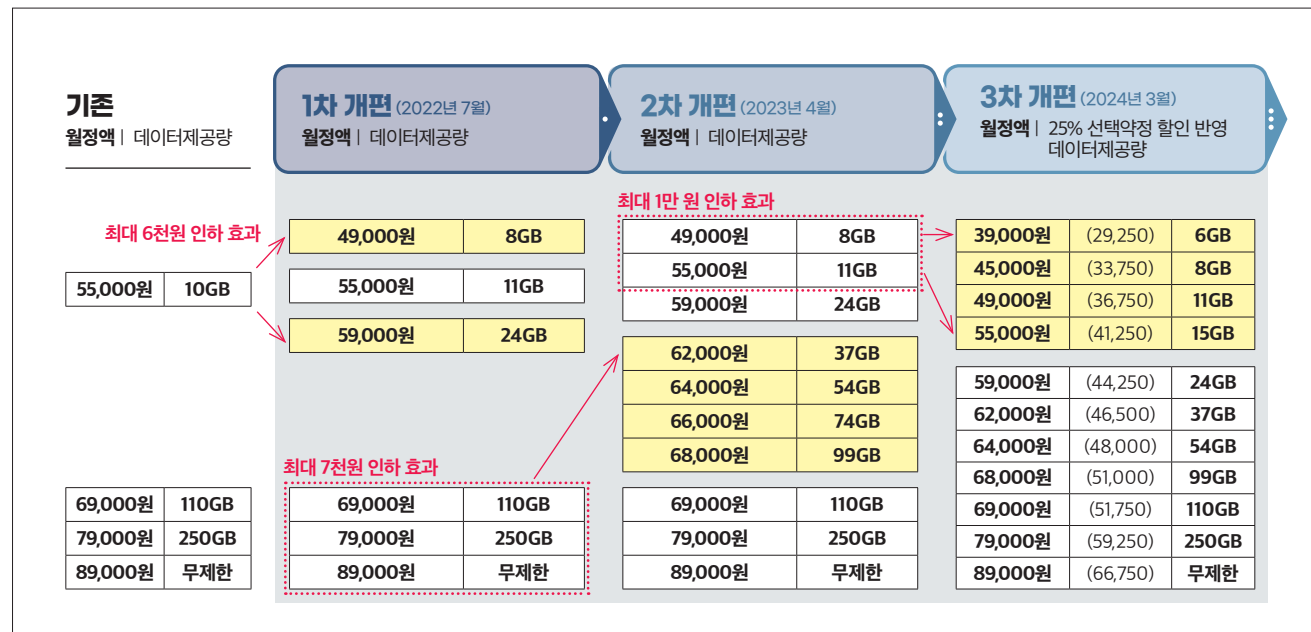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고 단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 출시해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확대했습니다.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제 도입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이에 더해, 2023년 11월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분을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약 5만 8,000개소가 구축됐고 시내버스에 구축된 2만 4,9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의 확산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총 99만 6,000명을 교육했고, 특히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신설해 약 13만 명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5종을 선정하고 6,603대를 보급·추진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2,288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해 농어촌의 주민들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를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통신사업자에게 중복 가중될 수 있는 투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과 접근권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 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새로운 우주거버넌스인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향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성공,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등의 성과를 확장·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의 대두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우주개발을 통해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는 '우주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우주탐사의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정부 우주개발 투자규모

- (2000년) 360억 달러 → (2010년) 690억 달러 → (2022년) 1,186억 달러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도전적·혁신적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우주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4월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2024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4년 1월 26일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2023년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와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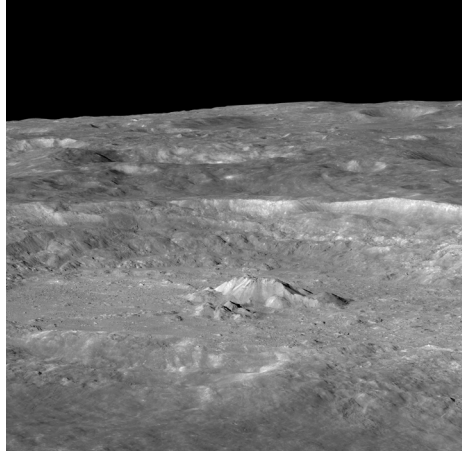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누리호 개발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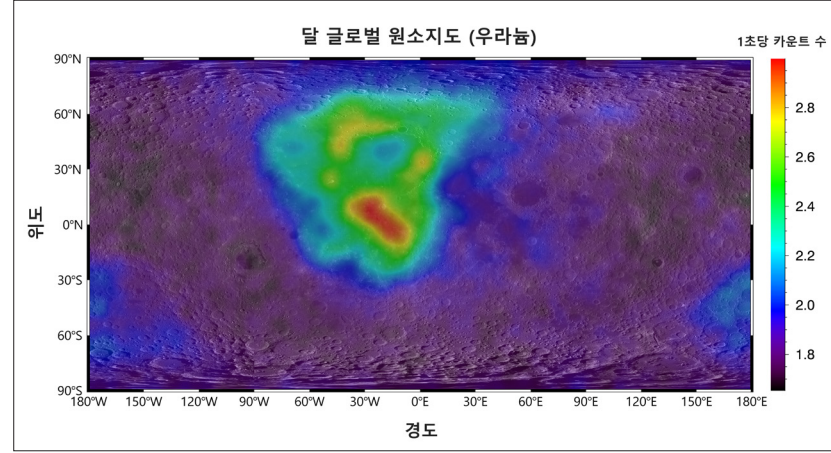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2023년 9월)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2023년 1~6월)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2022년 8월 5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간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2023년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키고,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 우주경제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해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을 공식 구성해 제1차·제2차(2023년 3·9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한일 위성항법 MoC 서명식 및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2024년 3월)

일본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 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한국 포함 15개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러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 신기술을 접목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

위성정보를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K-ARD(Analysis Ready Data, 분석하기 쉽게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위성의 위성정보를 가공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객체탐지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향후 위성정보 활용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기술과 영상 활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하는 한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확장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년 4월에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인을 선발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 산·학 연계형 인턴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해, 중장기 R&D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 (2022년) 44.5%  
수도권·대전 비중(2022년) : 인구 53.5%, GRDP 55.5% ⇔ R&D투자 79.3%, 연구원 73.3%, R&D 조직 69.2%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해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 권역별 공청회 개최현황 : 부산·울산·경남권(2022년 9월 29일), 호남·제주권(2022년 10월 14일), 대구·경북·강원권(2022년 10월 27일), 대전·충청권(2022년 11월 3일)

####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회복	자율	파격
 <p>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해 자생력 회복</p>	 <p>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p>	 <p>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p>

이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편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로 새롭게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발전시켜 이행하고,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회 협의회(2023년 4월)에서 10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1개 사업은 예산까지 연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육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적 과학기술 추진 역량을 갖춘 5개 전담기관을 별도 선정(2024년 1월)해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지역 현안해결 등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역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2024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R&D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 등 지역 주도의 자생력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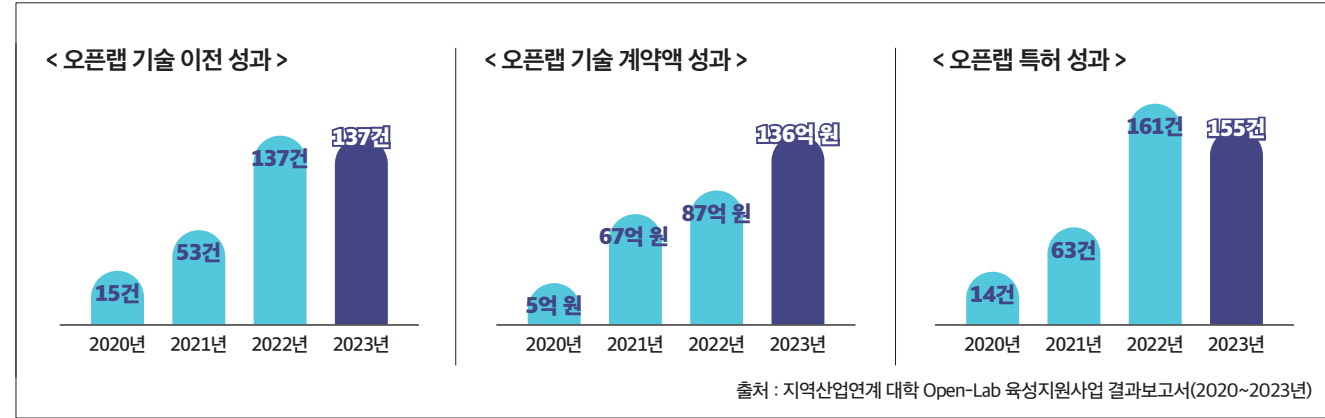
###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22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532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SCI 논문 943건(JCR 상위 10% 228건(24%)), 특허 265건(출원 221건, 등록 44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23개 기업과 총 21억 444만 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 과제(경북·대구:이차전지, 광주/전남:첨단AI, 경남/울산:수소커뮤터기, 충남:해양바이오, 전북:동물의약품)를 선정했고, 각 연구단별 지역혁신 추진의지 및 미래비전 발표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을 통해 SCIE급 논문 42건, 특허 출원 20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4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역역량 결집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이 지역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 발대식 개최현황 : 충남(2023년 6월 26일), 경북·대구(2023년 7월 5일), 전북(2023년 7월 6일), 경남·울산(2023년 7월 14일), 광주·전남(2023년 7월 26일)

또한 Open-Lab이라는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7개 대학이 155개의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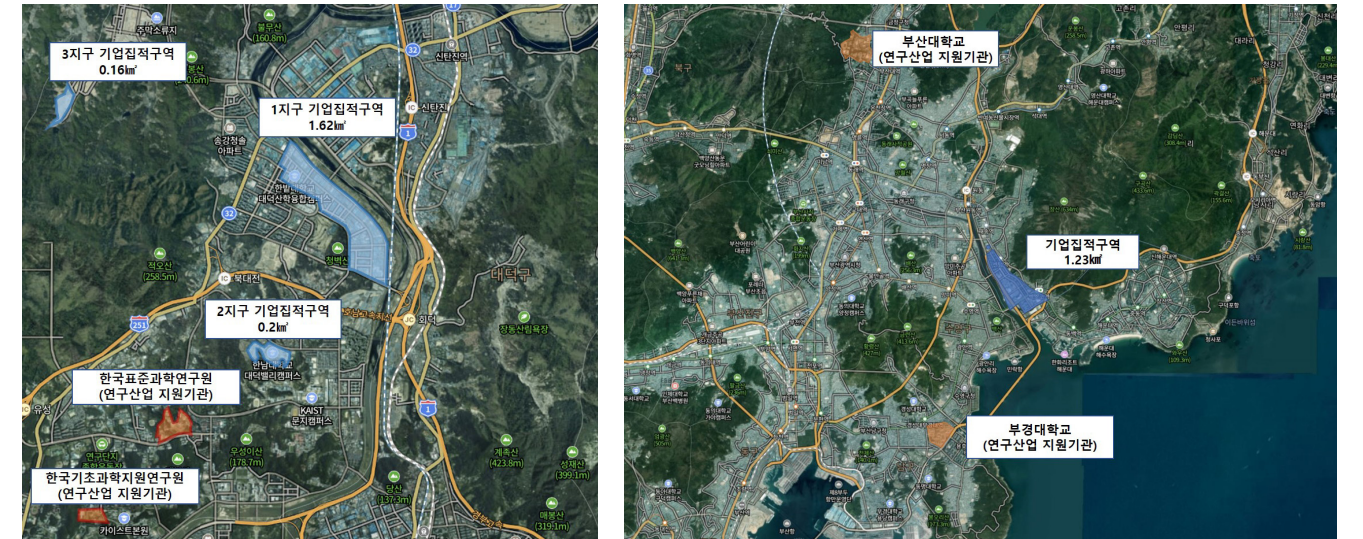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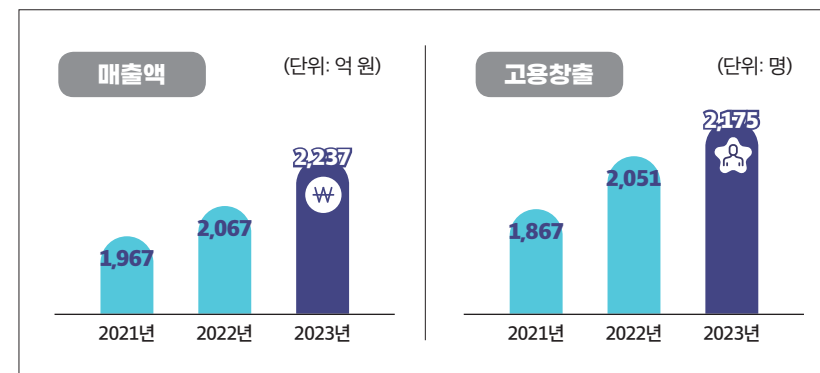
랩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265개 대상으로 총 342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입은 3억 7,300만 원으로, 2020~2022년 전국 대학 평균 건당 기술료가 2억 1,500만 원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R&D 혁신 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4개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충청권(충북대-원자력연, 기초연), 호남·제주권(전북대-KIST), 동남권(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경북대-ETRI) 총 4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전문인력 양성 154명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추후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적극 공유해 기존 과제 중심 협력에서

#### < 특구육성 성과 >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대학-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해 광역연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R&BD 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42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됐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237억 원(전년대비 8.2%↑), 2,175명(전년대비 6.0%↑)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1~2023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초·중등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양성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 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인재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22년 8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2024년 신규 3개교),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규 5개교 → 2024년 9개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2년 신규 2개교 → 2024년 8개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2024년 58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기존 지원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 고도화를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과학에 대한 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2023년 4월)는 'Science is ∞(과학은 무한대이다)'를 주제로 해, 전 국민이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와 삶이 공존하고 미래로 연결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역대 최대 관람객 수(40만 1,000명)를 달성하는 등 도심형 과학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에게 과학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손쉽게 과학교육·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73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으며, 5개 권역 10개 지역에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3개소(강원 원주, 울산, 경북 포항)와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강원 영월)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통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문화로서 체감하고, 소통하며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해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 1위 수출품목(국내 수출의 약 16%, 2023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내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2023년 8곳 → 2024년 18곳 대학·연합)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추진(2023년 10교 → 2024년 27교)해 인재들이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반도체 및 첨단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원을 확대(2023년 3개교 → 2024년 6개교)하고, 폴리텍대학 반도체학과를 2023~2024년 연간 10개과를 신설해 반도체분야 수준별 학위·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8대 공정분야 및 소재·부품·장비의 가치사슬별 교육훈련을 세분화해 현장중심형 학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2023년 3월, 교육부 고시)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2022년부터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사업을 운영해 교원의 AI·디지털 교과융합 역량 향상과 교원양성기관의 AI·디지털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영(2023년 9월 기준, 2,960명 재학)해 교과와 연계된 AI 융합교육이 학교 수업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해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현장의 목소리

### < AI융합교육대학원 졸업생 인터뷰 사례(2023년 6월 기준 졸업생 23명 대상 심층 인터뷰(2023.7.10~7.18)) >

- “국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누구보다 빨리 접하게 됐으며, 디지털 시대의 융합교육 과목에서 AI융합수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현장에 AI융합수업을 적용할 수 있었다.”
-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교과와 연결지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들께 현장 연구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4년 29교)해 예비교원의 학교 현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지난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도 총 40종(신규 16종, 보완 24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 (초)17 → 34H, (중)34 → 68H, (고)정보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2023년 3월)했고, 2024년 영재학교·과학고 10개교를 선정해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을 지원해 높은 취업률(2023년 84.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및 디지털 선도학교 등 거점학교를 2,200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대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0교 → (2025년) 28교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40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17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했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통(2023년 8월)했고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누적 72만 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720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4년에도 720명 학생에게 내실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2023년 2월 1일 출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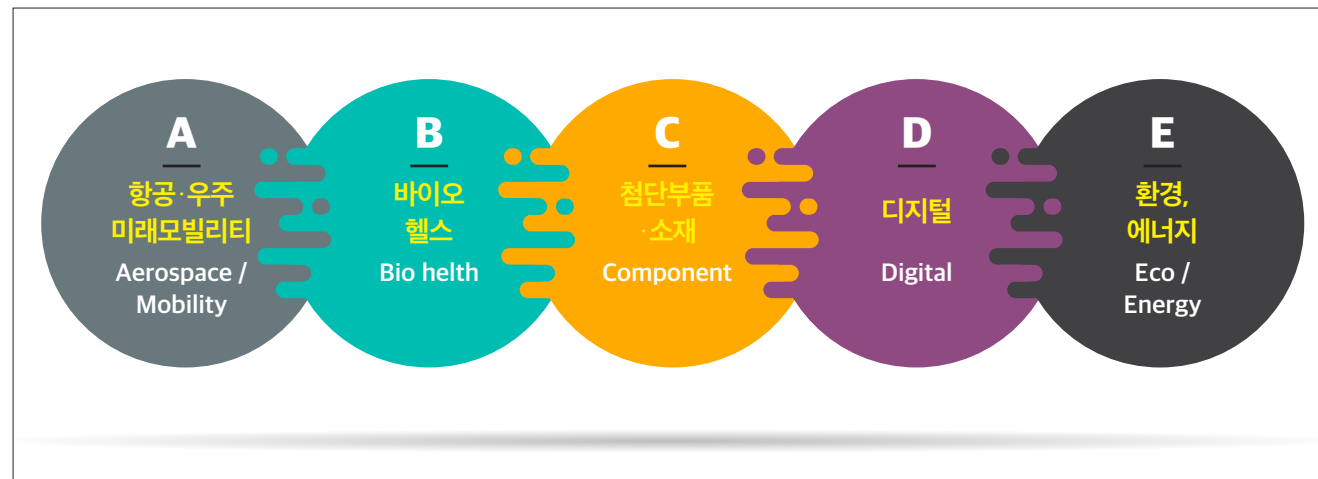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해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ABCDE)를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분야별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에코업·에너지 등 특정 첨단분야 외에도 이공계 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도 2023년 5월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착수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은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경로를 구축해 맞춤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수업설계, 개별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육과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캠퍼스SW아카데미(2022년 8개→2023년 10개), 기업멤버십SW캠프(2023년 184개 기업, 29개 과정),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해 2년간 2만 여 명의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으며, 심화 멘토링을 기반한 SW마에스트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이노베이션아카데미(서울, 경산)를 운영해 혁신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도 공식 출범했으며, 3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258개 훈련기관의 626개 훈련과정을 확보, 약 6만 6,000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 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2만 원, 6.7%)보다 높게(232만 원, 18.2%)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해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첨단 및 융복합 분야)와 지원대상(+재직자 및 사업주)을 넓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훈련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훈련생 특성에 맞춤 개별화·맞춤화 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신기술 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대상의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을 2021년 1,230명에서 2023년 1,530명, 2024년 2,030명으로 지속 확대 운영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에 맞춰 전환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028 대입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1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1월 교육부 내에 입시비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입시부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https://fair-edu.moe.go.kr>

#### < 입시비리 신고센터 처리현황(2024년 4월 현재) >

구분	수사의뢰	이송	처분	조사중	종결	합계
건	1	2	1	5	48	57

앞으로도 입시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시 비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 분야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설서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했으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정 718책)도 안정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2023년 6월)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존치 방안을 확정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1월)했으며, 자율형 공립고 2.0사업을 신규 추진해 시범운영(2024년 40개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해 지역별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지도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학 등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진로·학업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실 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AI·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평가제도 및 기초학력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초6, 중3, 고2)해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학생의 종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4년 초3·5·6, 중1·3, 고1·2 → 2025년 초3~고2)하고 책임 교육학년제(초3, 중1)를 도입해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여 개 대학에 배포해 교양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37개교로 확대해 대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5개 컨소시엄(2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공분야 학제간 융합연구 25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문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류·협력 및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 부설 융복합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2개 → 2023년 4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하는 ‘e-북드림’ 사업 이용자 수가 185% 증가(2022년 4만 7,000명 → 2023년 13만 5,000명)했으며, 학교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해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 74종을 개발하고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를 지정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학의 해외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주요과제인 CAMPUS Asia 한일중 사업(20개 사업

단, 70여 개 대학 참여),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초청장학제도(GKS)를 통한 신기술분야 이공계 석·박사생 유치를 확대(R&D 트랙 선발규모 2023년 60명 → 2024년 300명)했습니다.

###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사교육 대책 마련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4학년에서 초5~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기반으로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방과후·방학),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지원 튜터링(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해 국민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개인의 특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인증된 역량을 시각화하고, 축적된 경험과 성취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이력 체계를 지원해 효율적 인재 양성·관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육 등의 모든 과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 < 주요인문보도 >

- ‘문송’ 옛말로 만들 인문사회 융합인재(한국일보, 2024.3.28)
- 청소년은 정부지원 전자책 무제한으로 구독 가능...‘이북드림’ 확대(뉴스원, 2023.6.27)
- 이주호 부총리, 스팀교육 선도학교 방문(뉴시스, 2023.8.7)
-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으로 두배 늘린다(조선일보, 2023.8.24)

##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해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학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2022년 6월)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해 2024년 3월까지 총 14차례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으로 교원,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학생 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

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23년 12월 5일)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시 교육부 승인 없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사·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3월)해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학위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주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기술 창업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고도화방안'을 발표(2024년 1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해 창업친화적인 제도를 확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해 5개 권역으로 확대했고,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으며, 2024년에는 전문대 2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권역별 일반대-전문대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한 창업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IGE+) 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우수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에서 창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IDI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2022년 기준 836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3년 BRIDIGE 사업을 3기로 개편해 신규 참여 대학 24개교를 선정했고 2024년에는 6개교를 추가 선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계대학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정위험을 기반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지표를 2022년에 개발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잠재적 경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진단지표 고도화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약 53억을 투자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재정진단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시이사 교육 등을 통해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 원하는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해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계속 보장해나가겠습니다.

###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2023년 7월)하고,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해,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2023년 12월)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2023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이른 하교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2023년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2024년 2월)했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838개교의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모두 수용해 초1 학생의 74.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4년 초1부터 2025년 초1~2,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1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초2 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 등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및 돌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23개와 선도학교

“  
현장의  
목소리”

### < 2023년 선도학교 운영해 보니 학교가 이렇게 변했어요 >

-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못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던 학생들의 수업참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줄어들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까지 좋아졌어요.”
- (교사는) “학교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생활지도도 수월해졌고요.”
-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 신뢰가 높아지니 학부모 민원이 줄었어요.”

96교를 지정·운영했으며, 현장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는 시범교육지원청은 46개, 선도학교는 252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아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2023년 발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2022년 12월에 수립·발표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지수\* 개발, 통합교육 협력 모델교인 정다운학교 지정·운영(2023년 158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생 및 교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관점, 지식, 정서, 실천) 수준을 진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2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525학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교(849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2023년 1,130명)을 추진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 지정·운영을 통해 담당교원 연수 등 현장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진로 멘토링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탈북학생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2023년 8월)했고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2023년 10월), 전국 모든 교원 대상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개발·보급하고(2024년 2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1395)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교원배상책임보험 최소 보장범위) ①분쟁조정서비스 ②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만 원) ③배상책임(1사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④치료요양(200만 원내), 심리상담 비용 지원 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 등  
※ “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교사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뚝’(2024.1.5., 뉴데일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교원들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변화를 주도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 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4만 2,000여명 → 2023년 6만 2,000여명 → 2024년 8만여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2022년 8만여명 → 2023년 8만 3,000여명 → 2024년 8만 5,000여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장애인 학습자(2022년 2만 8,000여명 → 2023년 9만 8,000여명)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해 K-MOOC(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고도화(2023년 8월)하고 방송매체와 함께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을 집중 지원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 2023년 미충원 신입생 1만 4,567명 중 9,536명(65.5%)이 지방대학에 집중

###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밀도 높은 정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에 기반해 형성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는 지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

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체계 구축(RISE 전담부서 정비·전담기관 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컨설팅, 교육과정운영), 재정 집행 준비,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력(149회) 등을 통해 RISE 시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4월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해 10개 대학을 지정했고, 2024년에도 10개 대학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개 전 시도의 RISE 체계구축 및 RISE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글로벌대학을 30개를 지정해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기업은 신산업·신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첨단분야 관련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경험을 포함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윈스톱(WE-MEET)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2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3개 컨소시엄으로 확대해 186개 첨단분야 기업과 학생 2,367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 원으로 확대해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부터 인문사회분야도 신설해(300 과제) 연구생에 초기 단계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 혁신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G-램프(LAMP)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총 14교까지 확대하며, 2024년 신규로 지원하는 6교 중 4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의 핵심 교육·연구인력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3년 135교에 4,070억 원을 지원해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서도 2023년 19개교 267억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2023년에 236개의 성인전담학과(총 6,910명)를 설치해 재직자 등 평생·직업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 45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총 8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



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부터 누적 19개 분야 116개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했고, 지역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전환교육 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 5개 컨소시엄(전문대-광역자치단체)을 지원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입해 2023년 12월까지 총 1,825명이 수료하고, 922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고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2023년 3월)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가 탄소중립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확대 시행으로 국가재정 및 주요 계획·사업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효과 20조 원 달성 등 녹색금융·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를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사회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마련해 탄탄한 탄소중립을 이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sub>2</sub>eq) : (2018년) 727.6 → (2022년, 잠정) 654.5 → (2030년, 목표) 436.6(△40%)

###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실현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총 115회)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신규 핵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2023년 9월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0개 분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기금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2023년 9월 16개 부처 총 294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 수립한 탄소중립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 제출도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개소해 누적 943건(2024년 4월 19일 기준)의 상시·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별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1:1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그간 산업부-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EU CBAM 도움창구' 일원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탄소 감축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상할당 대기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21년 대비 6.3배인 1,38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반을 지원·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관리하고 지역과 국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탄소중립 거점 전문기관입니다.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전 광역지자체(1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7개소가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에 10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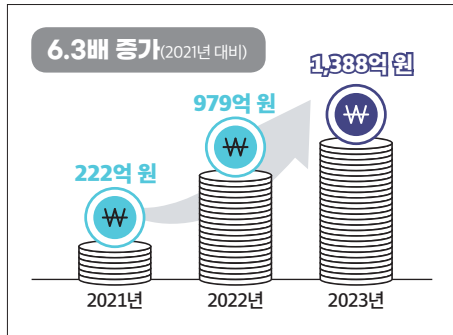
또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을 확대(6개 → 10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말 기준 제도 가입자 수는 104만 명으로 2022년말 대비 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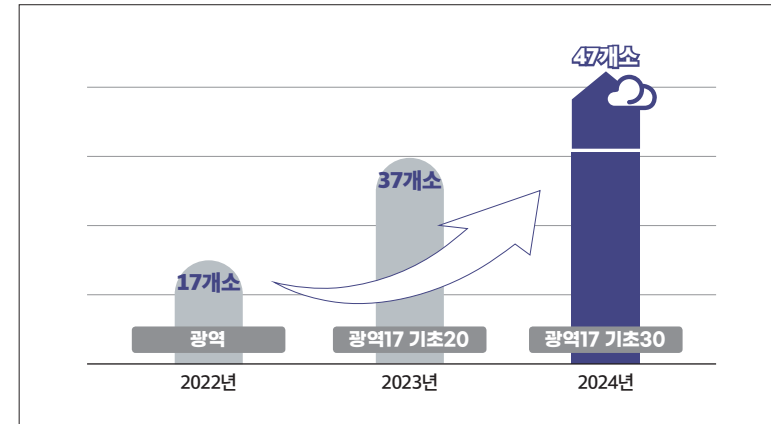
#### 도움창구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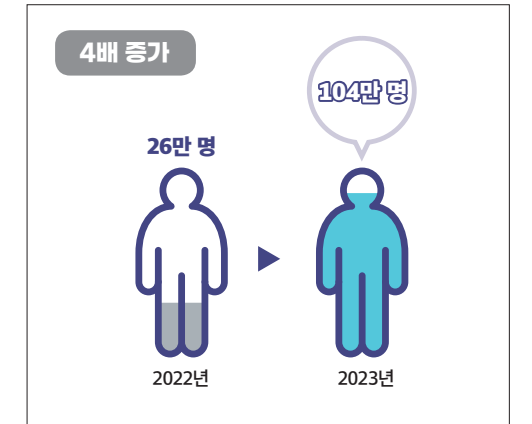
- CBAM 배출량 산정방법 실시간 전화상담 (☎1591-3213)
- 방문 기업 상시 컨설팅 (방문 10:00~17:00)
-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O&A 제작 및 배포, On/Off 교육·설명회(5회 이상)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개수 >



<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수 >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수립하게 될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국민이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5개사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4조 6,339억 원을 발행하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녹색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74개사에서 1,555억 원을 발행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ESG 대응이 어려운 수출업종 중소·중견기업 173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녹색소비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완구, 침구 등 131개 환경표지 제품군에 대해 유해물질기준 신설 등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접근성이 높은 식기류, 텀블러 등 6개 제품군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년까지 환경표지 전품목의 환경성을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인증 대상 품목을 3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환경무역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는 등 경제·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녹색기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개소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00조 원의 수출·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전방위 녹색산업 세일즈를 전개했습니다. 현지에 수출지원단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당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2023년 녹색산업 수출·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녹색산업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액셀레이터와 함께 유망 창업 아이템 30개를 발굴해 창업자금·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탄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3,01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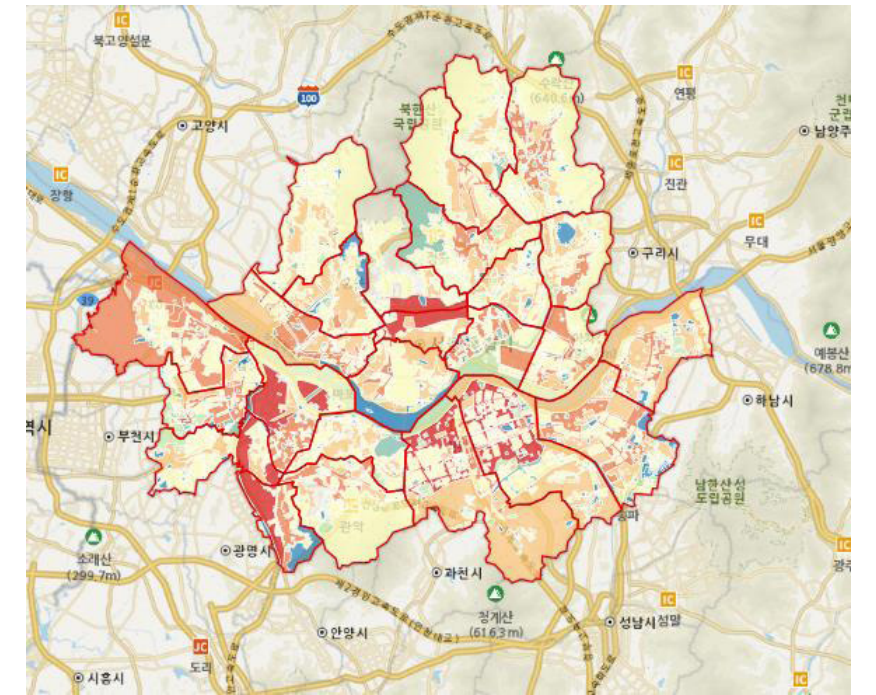
##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윤석열정부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해 탄소공간지도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탄소공간지도는 국민 누구나 용도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을 조회하고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도시별 탄소중립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각 도시들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확대·시행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 경향에도 불구하고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인증실적이 3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소전기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울

< 건물부문 용도지역단위 탄소배출량 시각화 >



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를 개소해 수소전기차 기능 검사는 물론, 검사시설 일부를 스타트업사무실, 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개방 종합문화시설’로 재창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20.9km를 개통해 전 구간 전철화를 완성하고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질없는 대책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본격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일상화된 물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치수(治水)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해 중장기 가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사후대응-관리체계 강화'의 순 과정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팔공산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서울 1시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2023년 중부지방 48시간 최대강수량 경신 및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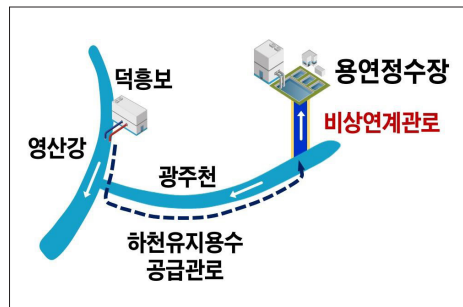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 (2021년) 81.0 (2022년) 83.1 (2023년) 85.3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일) : (2021년) 754 (2022년) 778 (2023년) 530
- 국가 육상보호지역 면적비율(%) : (2021년) 17.15 (2022년) 17.3 (2023년) 17.45

###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제정되어,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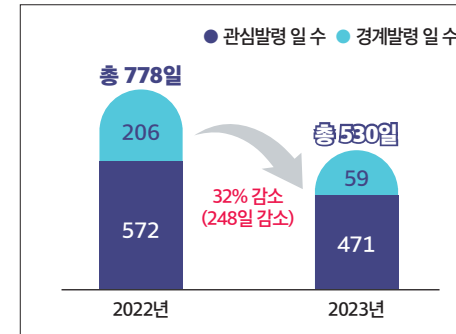
2023년 12월,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천·댐, 도시침수 쏠부분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2024년 치수 안전 예산을 2023년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준설 등 하천정비 강화, 신규 댐 건설, 대신도 빗물터널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특보를 2024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에게 홍수특보를 문자,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최장기 가뭄은 보성강댐, 농업용저수지, 하천의 물로 대체 공급, 지하수저류댐 설치, 자율절수 등의 대책을 통해 극복했으며, 미래 극한 가뭄에 대비해 2023년 4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시·도, 2023년에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가뭄취약지도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용연정수장 연계운영

###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



### < 강원 수열 클러스터 조감도 >



### <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



###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아울러, 2023년에는 녹조관리대책 추진과 증가한 강우량으로 전국 조류경보제 발령일수가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낙동강의 경우 '경계' 단계 발령일수가 전년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별 미량 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및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2023년에는 물산업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해 2030년까지 20개 핵심 물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스마트·탄소중립·고부가가치 물기술제품을 단계적으로 발굴·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에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기술과 최첨단 데이터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소양강댐, 합천댐 등 총 6개소(시설용량 58MW)를 운영 중으로, 연간 2만 8,000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4만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3년 6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비전으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후보지 80곳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지하수저류댐 3개소(양평 양동면, 통영 옥지도, 인천 덕적도)의 설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일일 1,460톤(㎥) 규모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환경시설 현대화로 국민안전 및 도시활력 제고

1980~1990년대 집중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성능개선(개축)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악취 저감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시설을 지하화하며, 상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조사 실시 결과, 결함이 확인된 관로(2,126km) 중 92%(1,957km)를 교체·보수(2017~2023년)했고, 2023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27개소를 준공해 연간 약 45.2백만㎥의 누수를 저감했습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연간 약 1,144억 원(총괄원가기준) 절약하고, 온실가스 약 1만 1,160톤을 저감하는 효과에 해당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지진, 시설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댐 시설의 내진보강과 비상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성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광동댐 등 5개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준공했으며, 향후 용수댐(14개),



다목적댐(10개)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댐 시설에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023년 12월 윤석열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명산인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 지정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정부와 지역주민·종교계가 합심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는 보전하고 훼손지는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의 30%는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도 대폭 확대(311km<sup>2</sup>, 여의도 면적 107배)했습니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년(2022~2023년)간 무장애 탐방로(9개소), 저지대캠핑장(6개소) 등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며, 지역소득은 늘리면서 자연은 보전하는 생태관광지역도 2023년 6개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축관법 개정도 완료해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성을 제고했습니다.

###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돌발성 홍수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 및 산간 지역 등 강우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강우를 고밀도로 관측할 수 있는 소형 강우레이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7곳에 대한 강우 관측과 홍수예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소형레이더 2기(울산·부산)를 설치·완료했으며, 2024년까지 2기(광주·전주), 2025년까지 3기(대전·세종·청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반을 더욱 견고화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해양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기간을 여름철(6-8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예측간격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상세화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20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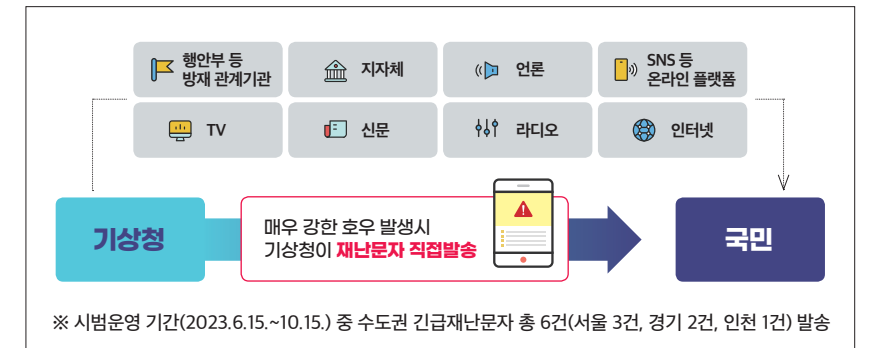
#### <울산 소형강우레이더 관측소>



###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태풍 '카눈'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중단하는 등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기상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 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하고, 한반도 태풍 상륙 예상 시에는 태풍정보를 한층 세분화해(6시간 간격 → 3시간 간격) 제공했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위험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에게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정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을 수도권에서 전 남권(광주·전남), 경북권(대구·경북)으로 확대하고, 단기에보 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겠습니다.

#### <긴급재난문자 체계>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기상청은 지진분석과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지진탐지를 위해 지진 발생빈도·피해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위치, 깊이, 시각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속도구조모델을 활용한 지진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최초 관측 후 동해 해역지진(2023년 5월, 규모 4.5)은 6초, 경주 지진(2023년 11월, 규모 4.0)은 5초 만에 신속정보를 발표하는 등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지진재난문자 발송을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진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과 극한 가뭄, 극한 홍수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한 물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무공해 전환 및 수송부문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과학적 기반의 사업장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무공해차 보급, 생활주변 공기질 관리 강화로 편안한 국민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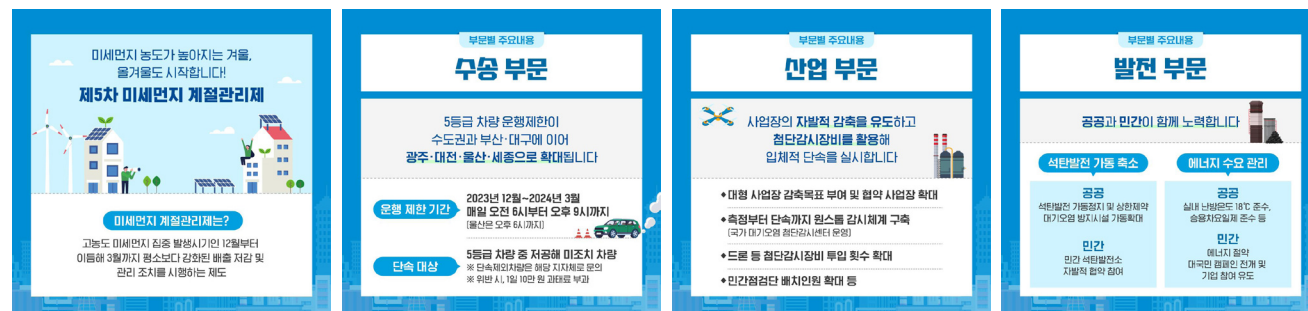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계획은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2.3%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작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는 것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사업장의 선제감축을 이행하고,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했습니다.

발전·수송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5기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 상한제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5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또

####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노력 >



※ 초미세먼지 저감 변화 : 4차(2022.12월~2023.3월) 24.6 $\mu\text{g}/\text{m}^3$  → 5차(2023.12월~2024.3월) 21.0 $\mu\text{g}/\text{m}^3$



한 기간 수도권만 시행하던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5% 낮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 근거 마련과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다배출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고자 2022년 10월 예보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2일전 예보 조기 제공 권역을 2022년 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 전국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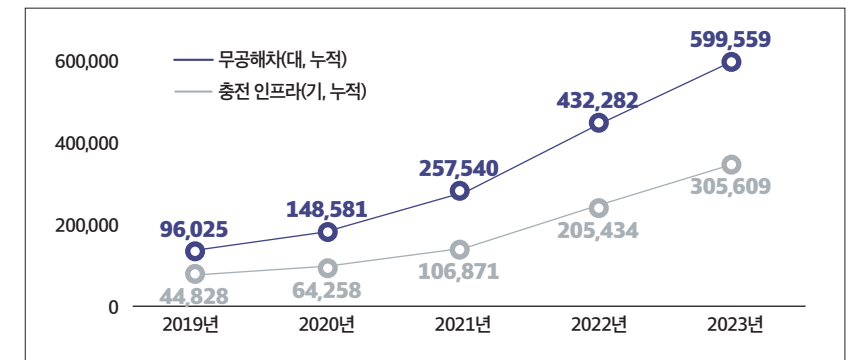
### 탄소중립 건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 추진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까지 보급된 43만 2,282대에 비해 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약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됐으며,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의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2023년 2월, 2024년 2월)했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자(86개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2023년 9월)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 상용차(2023년 4월 고상버스, 2022년 11월 화물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해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년

####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 → 2023년 100%)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정책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2023년 12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국제동향에 맞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조 전, 제조, 사용, 폐기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과정평가 방법 마련, 행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마련했고, 국내 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해 환경포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 규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의 질서있는 퇴출 유도

수송부문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누적 5등급차 145만 대, 4등급차 8만 대, 건설기계 1천대가 조기폐차를 완료하며, 무공해차 대수가 노후 경유차 대수를 초월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했고, 무공해차만 운행이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에 지정하는 등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을 병행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3년 6월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등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보조사업도 소형 전기 굴착기에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소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대형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까지 촘촘한 관리

윤석열정부는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사물인터넷 및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 단속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하고 균형있는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2023년 3월 ‘가스

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관리기준 준수 기간 유예 등)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1만 2,619개소이며, 2024년까지 총 1만 7,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2,049개소의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 추진해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형 건설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에 대한 공사 시간 단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많은 국민들이 머무르는 실내공간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지하철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 → 24 $\mu$ g/m<sup>3</sup>)을 목표로 지하철 승강장 및 도시철도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역사 및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민감·취약계층 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해 환경부가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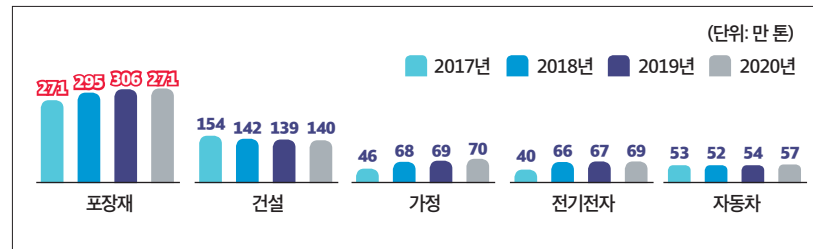
##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해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를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 톤 → (2030년) 864만 톤으로 증가 예상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 톤 → (2021년) 492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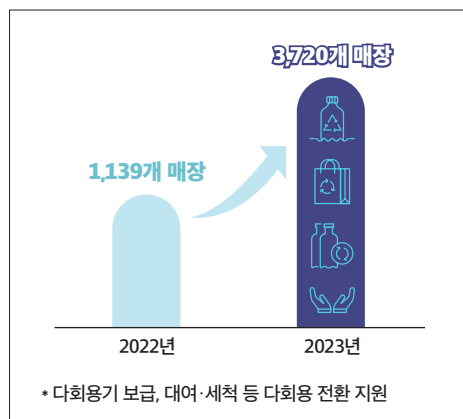
###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 < 다회용기 서비스 공급망 구축 >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 전국 30개 지자체의 3,720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컵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2월까지 다회용컵이 642만 개 사용되어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컵으로 판매된 컵 558만 개가 반환됐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중심으로 일회용품 감량 패러다임을 전환(2023년 11월)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확대(2023년 프로야구단, 면세점)하고,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2023년 69억 원 → 2024년 89억 원) 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대국민 참여형 홍보·캠페인(2023년 2만 8,000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에 최대 20%가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에 혜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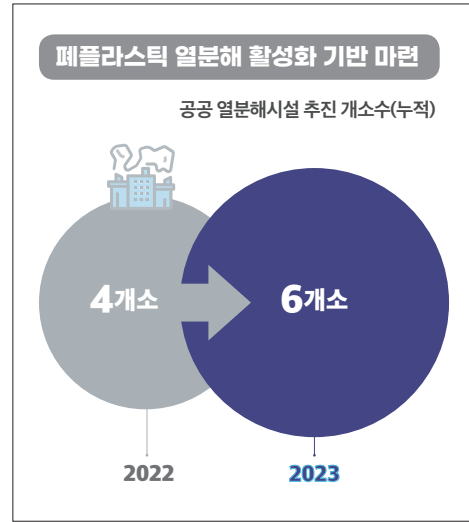
###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해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후한 공공선별시설 교체, 자동 선별시설 및 인공지능(AI) 선별로봇 설치 등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2022년도 24개소, 2023년도 16개소 신규 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근린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2022~2023년에 약 2,104톤 수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품목을 폐지, 폐비닐, 유리병,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로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설을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전국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착과 폐비닐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3년도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4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767개소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년까지 1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3개소(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적으로 4개소(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남양주시), 2024년에 8개소(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함에 따라 총 15개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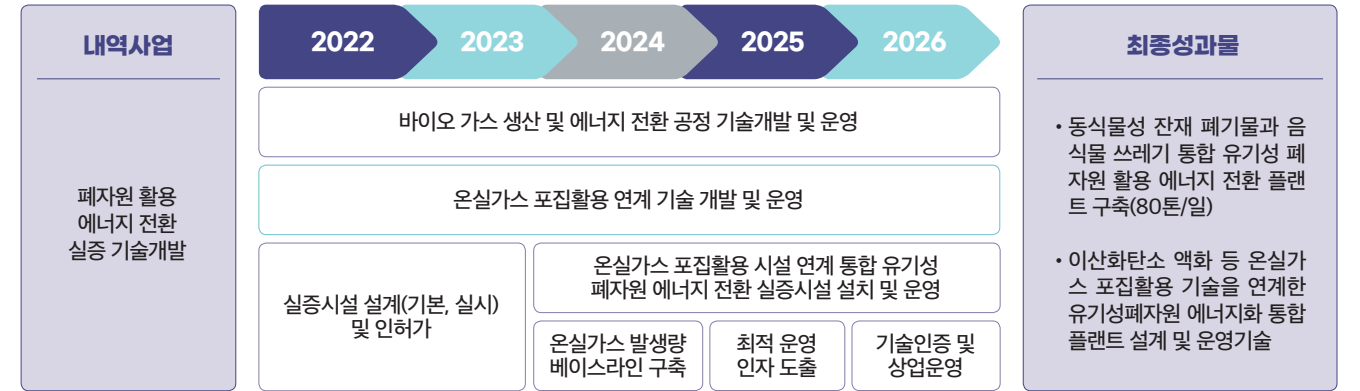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국고 총 33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 에너지화 기술개발 전문가 간담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에는

< 바이오가스화 시설 >



### <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기술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바이오가스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가스법과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및 관련 생산·활용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월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2023년에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바이오가스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말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과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바이오가스의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과징금 감면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해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 호 공공주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연합 기숙사 확충으로 청년의 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도 창업역량 강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줄어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장학금·학자금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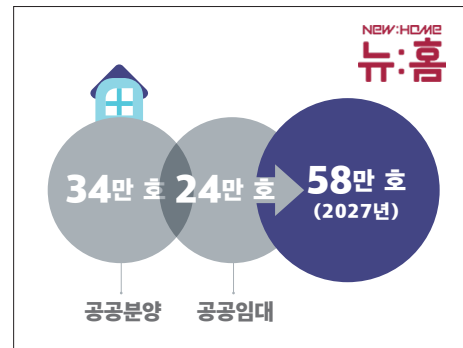
###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윤석열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및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대와 30대가 전체 접수자의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1을 기록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한 수많은 국민의 말씀 청취(연간 약 4천여건 민원)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년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년 9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년 11월)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배우자의 결혼전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등

###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만 6천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직무역량 향상 등의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기업은 채용 브랜딩 강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과 기업이 손쉽게 일경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일경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경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74개 기업·단체의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2023년 804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학습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업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의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 풀(pool)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1학년때부터 꾸준히 상담을 통한 적성 확인과 직업 정보 탐색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2023년 대학 재학생 참여자)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 대학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24년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산학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기업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취업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20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 창업 기반 강화

대학발 창업과 지역기반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창업중심대학’을 신설(6개)하고, 2023년에 3곳을 추가 선정해 총 9개의 창업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창업기업 선발 시 청년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청년 창업클럽 경진대회’, ‘유스 프로그램’ 등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공간, 교육, 사업화 등 창업 쏠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년간(2022~2023년) 1,830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206개사에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에는 엑셀레이터 등 민간운영사가 기업 선발, 육성, 투자유치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5개소로 확대해 청년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 원) 신설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를 확대(2023년 1,052억 원, 2024년 1,187억 원)해 16개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등 신산업 중점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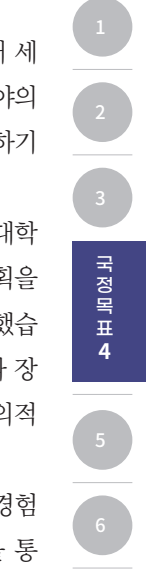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대학별)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4년 2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일반학생(10개교 820명)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10개교 2,813명)을 대상으로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6개 종목에 대해 군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1만 1,949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3년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2023년 12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하고,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2024년에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기부금을 활용해 건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공부문 공정채용 상설전담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켜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고, 신취약청년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청년 감수성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예산으로 약 3,5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는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3,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	-	-



청년도약계좌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의 경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더해 출산이나 휴가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3년 이상만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한 채용비리 건수는 44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피해자 14명 구제 추진)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유관단체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공직특례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15개 시험의 공직경력인정 특례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익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

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의 단기 인정(2년)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동관계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관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윈스톱으로 지원했으며,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프랜차이즈협회 및 외식업중앙회와 연계해 매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준수를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취약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상한 데 이어 월 50만 원까지 인상(2024년 1월)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 ON)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12월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 활동으로 확실히 공공기관 채용이 달라진 것 같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함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중 청년패널, 2023년 12월 8일)

##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위원회와 17개 시도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보좌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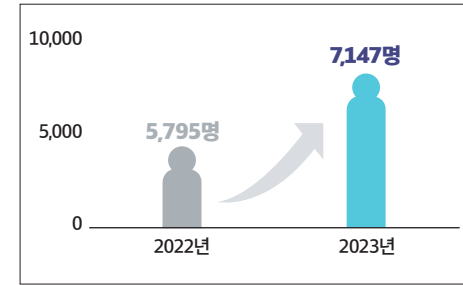
###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2023년 3월 청년기본법(2023년 9월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기관 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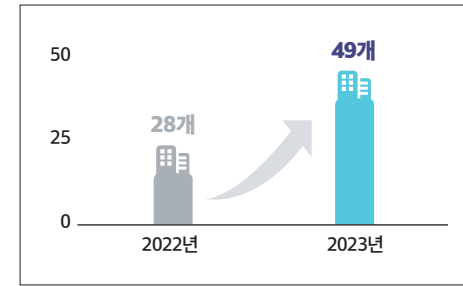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3.12.13)

### < 사업 참여 청년수 >



###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복지 5대 과제'(2023년 9월)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3년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가 발표(2023년 12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소속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굴하고, 고립도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28 → 49개, 175%↑) 및 청년(5,795명 → 7,147명, 123%↑)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7,147명)중 3,768명(52.7%)이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일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장기간 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주, 15주, 25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 및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도전+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

- (지원규모) (2023년) 8,000명 → (2024년) 9,000명(+1,000명)
- (프로그램 다양화) (2023년) 단기+중장기(5개월↑) → (2024년) 5주, 15주, 25주 이상
- (지원수준) (2023년) 최대 300만 원 → 최대 350만 원(참여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도전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즉시 연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채용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현장 간담회 (2023.6.27)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DB’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9천 7백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DB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수시·경력 채용 증가, 채용 시 직무역량 강조 등 기업 채용문화가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천명 신규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는 한편, 정책과정에 참여해 청년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청년들의 요구로 2024년은 46개 중앙행정기관 5천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정부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등 중앙 및 각 시·도 지역의 청년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추에 따라, 청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중앙 및 14개 시·도의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중앙센터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시·도센터 : 2024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이며, 17개 시·도 중 올해 4월에 1차로 14곳을 지정했고, 미지정한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가 지정 예정

중앙 청년지원센터는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별 특화된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앙-지역 간 유기적인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오프라인 청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의 청년정책 정보를 조회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34억 7,300만 원)을 확보해, 온라인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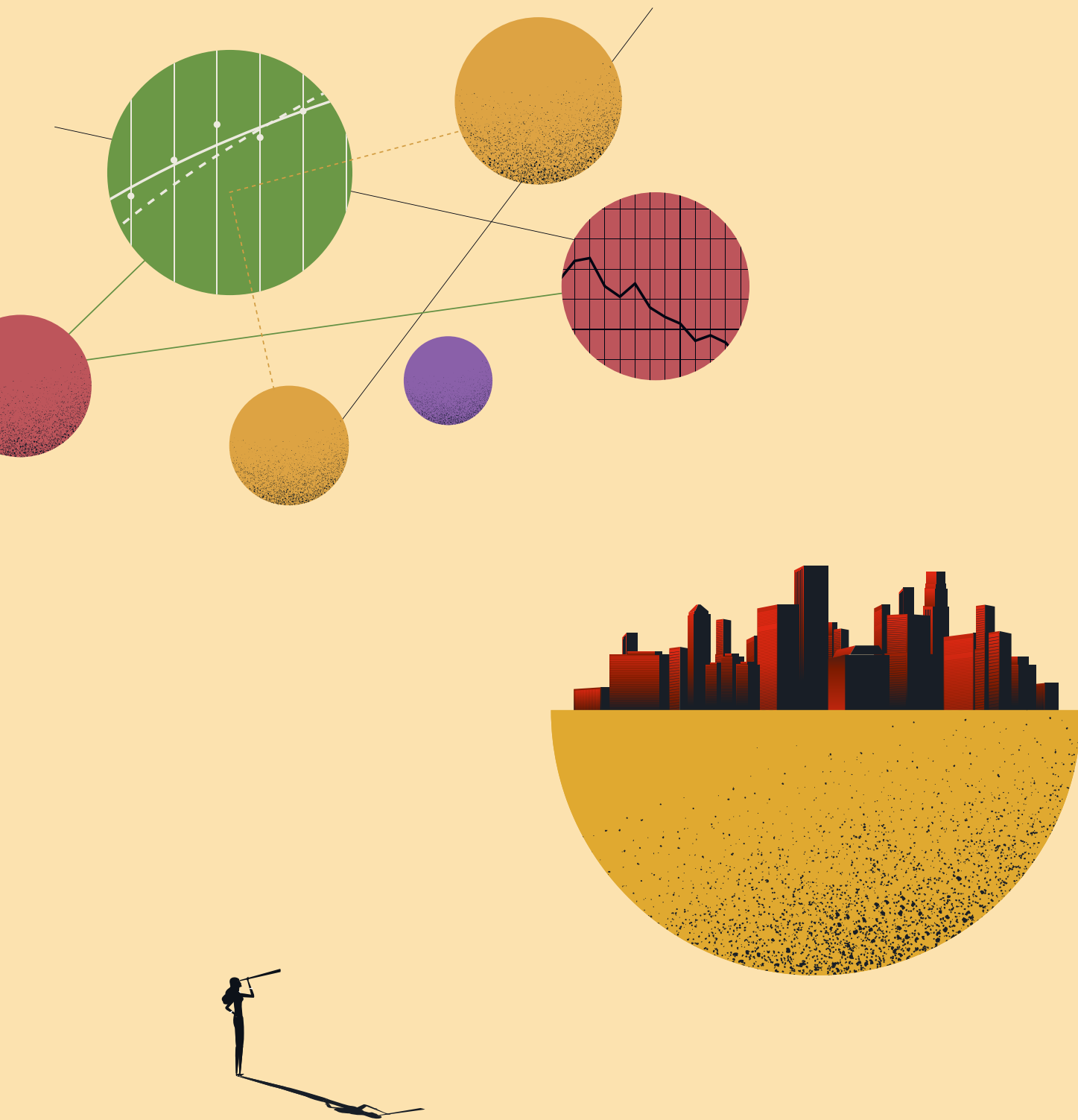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경제적 조기 자립 등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 불평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주요 내용 >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li> <li>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2년 8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부령 개정 완료(2022년 12월)</li> </ul>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li> <li>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5월)</li> </ul>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li> <li>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개정 완료(2023년 11월)</li> </ul>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li> <li>아이돌법 지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11월)</li> </ul>
국가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어학시험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한국사시험의 인정기간은 폐지</li> <li>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4년 3월)</li> </ul>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해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

# 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미·일 등 핵심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미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해상 불법 환적 등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한정된 자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 그리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기초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총체적 ‘3D 접근’, 즉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미·일 등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면서, 핵실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호전적 연사로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선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7월 출범시켜 연내 2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정례적이고 보다 빈번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습니다. 2023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12월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등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들을 적극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주최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주요국과 정상, 외교장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 협의를 300회 이상 가지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여론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G7, EU, UN 등 주요국 협의체 및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SEAN은 2023년 9월 정상회의의 결과문서에 북한의 왜곡된 책임 전가성 주장이 담긴 문안은 배제하고, ICBM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 깊은 경악’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ASEAN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설득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개국과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제주포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통일외교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 대상 통일외교 인식조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2015년 이후 최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 지지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EU, 독일,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등 8개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초로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은 2022년 이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를 향해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를 지속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 강화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24년 1월 10일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50개국 및 EU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하는 등 불법적인 러·북 협력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북한 도발 시마다 국제사회 내 압도적인 규탄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촉구했습니다.

### <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회의체 운영 현황 >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6차례 개최, 2022년 8월~)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2차례 개최, 2023년 12월~)
-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1차례 개최, 2024년 3월~)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재 북한의 최대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총 6차례 개최했으며,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의 후속조치로 신규 출범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도 2023년 12월 7일과 2024년 3월 29일 2차례 개최했습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IT인력 활동 차단 관련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각각 개최하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합동권고문(2023년 6월) 및 북한 IT 인력 한미 합동주의보(2023년 10월)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2024년 3월 26일에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차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정제유 밀수 차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에 적극 대응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단해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초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포함, 역대 정부 최다 횟수인 총 17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한·미·일호 연쇄 제재를 발표하는 등 우방국간 대북 독자제재 연대 구축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고, 2024년 1월 17일에는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8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북 제재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상외교 계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최초로 '납북자·억류자·군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기적인 인권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2024년 4월에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EU와의 북한인권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가치공유국들과의 기존 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던 아세안과의 공동성명에 10년 만에 최초로 '북한인권'을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23년 4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에는 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



유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와 함께 2023년 9월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23년 10월에는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2024년 2월에는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2024년 5월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아웃리치 행사를 개최하며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북한의 대화 거부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남·북·미 3자간 안보 대화채널 구축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대면 협의 15회 포함 총 37번의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한과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지속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복귀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윤석열정부는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기,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표명하며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탄 입장 표명과 함께, 제재 등 상응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1일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임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약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령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재개했고, 카드뉴스와 설명회(2023년 11~12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자유평화 통일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근거한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업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2023년 2월 28일 발족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담길 수 있도록, 2024년 3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국인 등 여러 분야의 위원을 보강해 위원장 1명 포함 45명의 위원, 5개 분과(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담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종교·교육 등 각계 간담회, 공모전, 분과별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 미국, 독일, 베트남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협력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북한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이화여대)

### 북한 바로 알리기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목포, 춘천)를 순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실상을 생생하게 알리므로써, 우리 국민의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2024년 2월 최초로 공개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대성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것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경제활동·의식 변화 등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학계, 연구기관,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4년 3월 1일부터 AI·빅데이터 기반의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내외 정부·언론·연구기관의 흩어진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22년부터 단행본·정기간행물 등 총 5,825건의 북한 전자자료 구입, 소장 중인 도서 및 간행물 등 29,139건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3년 8월 캄



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자 차원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채택하고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사우디 정상회담(2023년 10월 24일), 한영 정상회담(2023년 11월 22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2023년 12월 13일)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9월 말~10월 초 영국·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과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2018년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9월 권역별 센터로서는 처음으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4년 강원권, 2025년 경기권 및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일문화행사인 ‘통하나봄’을 서울·목포·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한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한 통일문화 공감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통일 공감대 형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기본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으며,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했으며, 취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사업,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위기정보를 통합·분석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2023년 12월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피폭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주군 인근지역 출신 8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의 날(7월 14일)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출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탈북민 어울림한마당’,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와 제3국 출생 자녀 증가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반영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한편,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 공간 구현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으로 개편하고자 2023년 3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2023 통일교육 기본교과’를 발간했습니다. 유튜브·웹 드라마와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기술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자단’, ‘창작 통일동요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2022년 211개교, 2023년 220개교)해 학교 현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지역 학교·대안학교·재외 한국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극 발굴해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통일안보 현장 50곳을 선정해, 체험과 교육, 흥미를 가미한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헌법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관·북한관·역사관을 갖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북한인권 실태조사 이후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송이물망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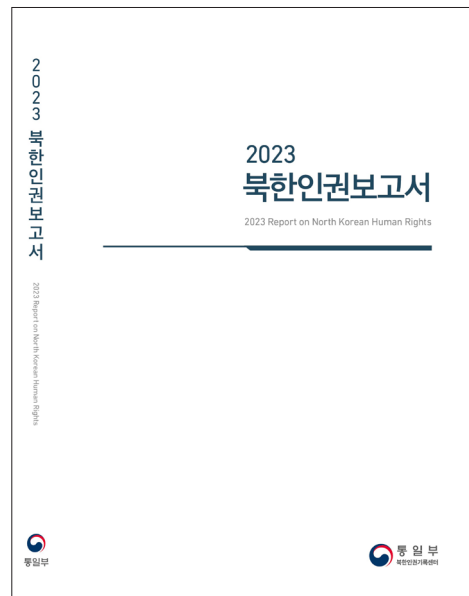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해 동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2023년 12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간이자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9월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개 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19개 단체를 선정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정부는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를 초청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인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북한이탈주민 등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를 8차례 개최했고, 워크숍(2023년 11월 30일)에서 10대 정책제언을 도출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간 공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교수를 임명하고, 11월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 영국, 일본, EU 등 북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12월에는 통일부 주도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3월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11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핵심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다시 개최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9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10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을 면담하고, 유엔 및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12월에는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상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통일부에 납북자 관련 전담기구인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북관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 모색과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0월 8일 김정옥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6명의 가족에 대해 납북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보상을 신청한 5가족을 대상으로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11월 14일에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열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만들어 2024년 2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쇼에서 이를 공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3월 26일)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참석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세송이물망초’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는 2023년 3만 6,684명(2022년보다 14% 증가)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개관 이후 총 20만 3,427명(2024년 3월 31일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추석 전전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날, 음력 8월 13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세대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이산가족 문제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2023년 7월 북미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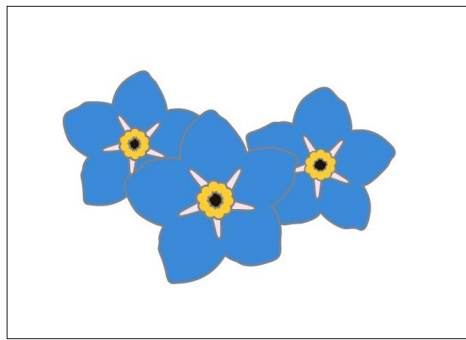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만 7,794명의 유전자를 채취·검사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08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영상편지는 공개본에 한해 한반도·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윤석열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경봉쇄와 도발을 지속하며 유엔기구의 복귀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협력기금 사업의 투명한 공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과거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기구와 함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송이물망초’ 상징물

##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교류·소통을 실시하고,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서틀외교를 보완함으로써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북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된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기반한 균형있는 대러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발전 및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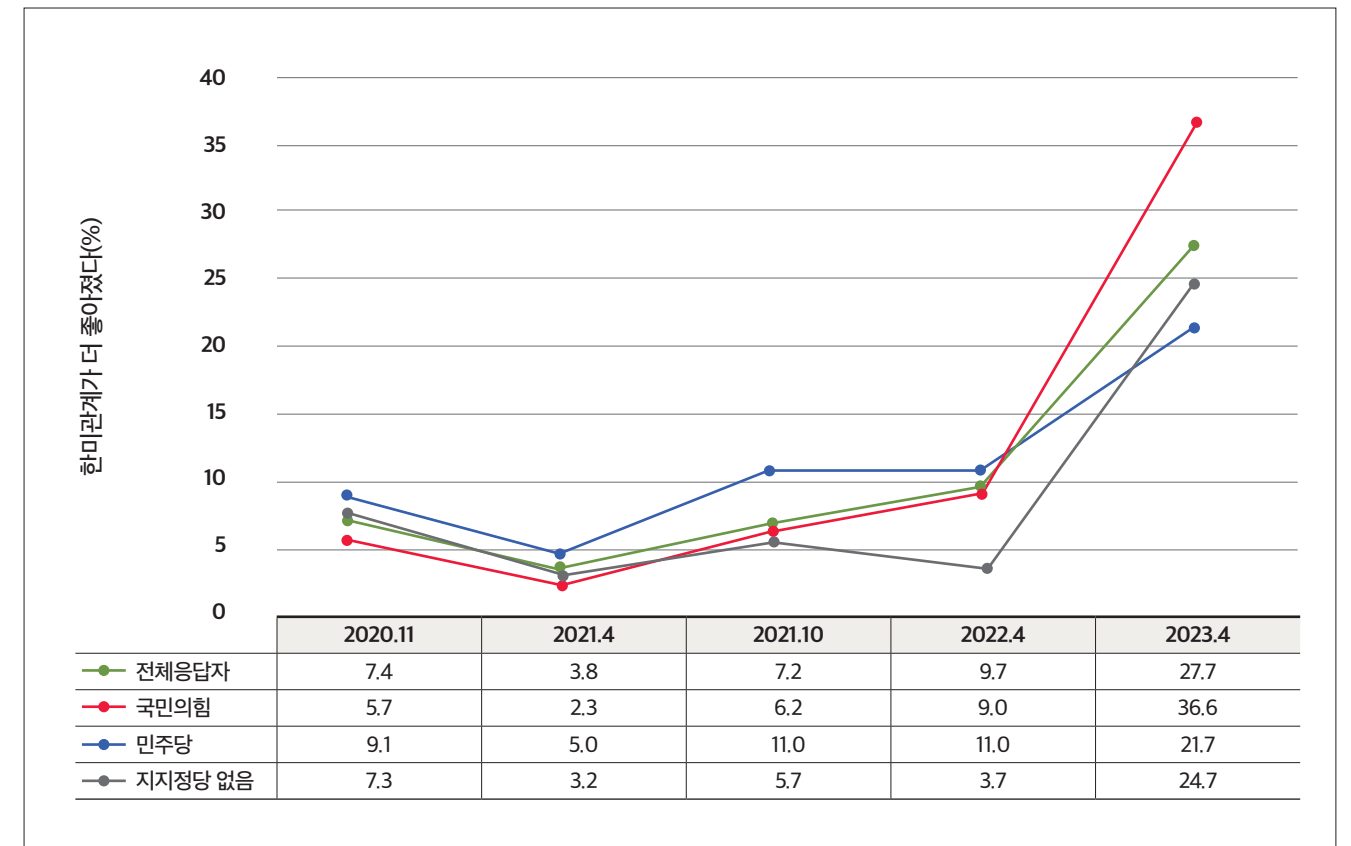
정부 출범 11일(역대 최단기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2022년 5월)해 미 측과 함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2023년 4월)를 통해 정상 차원에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수립하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장관 방미(2022년 6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미 국무장관 방한(2023년 11월, 2024년 3월) 및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022년 8월, 2023년 5월) 등 전략적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대미 아웃리치도 확대·심화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방미 계기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주정부 고위급 인사, 주요 싱크 탱크 인사 등 미국의 각계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국빈 방미 시 정상 간 합의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밀

도 있는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2023년 9월에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빈 방미 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선언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용산기지를 신속히 반환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초까지 반환기로 한미 간 합의(2021년)한 50만㎡를 포함, 현재(2024년 4월)까지 전체 반환 대상 면적의 약 30% 반환을 완료했으며, 반환 부지 일부는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임시 개방(2023년 5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지 반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마약, 교통사고 등 주한미군 범죄·사건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고 피해를 지원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됐습니다. 국민 중 27.7%(2014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가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통일연구원, 2023년 6월), 대다수가 한미동맹이 중요(91.6%)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53.7%)고 답변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 통일연구원 주관 ‘통일의식조사 2023’ 한미관계 개선평가 결과(2023년 6월 5일) >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의 선순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사상 최초로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 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고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으며, 다년간 3차 훈련계획을 수립·발표하고 2024년도부터 동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이어지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됐으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로 실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응적·주도적 해법이자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12년만에 성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2023년 5월)이 성사되며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작년 한 해동안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 총 7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GSOMIA 완전정상화를 통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을 마련했으며, 북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이래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지속적인 지방 간 항공편 복원 노력 등을 통해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했으며, 무력 충돌이 벌어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정상 방일 계기에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한일관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층의 상호 이해를 제고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윤석열정부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방한 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환경 하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표명했으며,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내외가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등 과거사 관련 일측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중관계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통령·총리 등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023년 9월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국무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이 연달아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2024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회담과 통화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



국무총리-시진핑 주석 회담

월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양국 외교수장 간 셔틀외교가 완성됐습니다.

한중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해마다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 공동위를 개최해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인적교류도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대비 2024년 3월 한중간 정기항공편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전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이어져,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 내 한국 드라마 18편이 방영됐고,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가 18건 발급됐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 계기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기간 동안 추진된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한중관계를 이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2022년 9월, 2024년 4월), 한중 우호수호천사단(2023년 4월, 2024년 3월), 한중 청춘원정대(2023년 4월) 선발 등 양국 청년 간 참여형 교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침체됐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한·일·중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년 만에 한·일·중 고위급회의(SOM, 9월)와 외교장관회의(11월)를 연달아 개최해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안보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인문교류 등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해 한중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위해 일·중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정부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2023년 7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러시아 측과도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 계기 한러 외교장관이 면담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러시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된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적극적인 동아시아 외교를 앞으로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추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와도 고위급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래 정상회담(24회), 총리회담(13회), 외교장관회담(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9월 개최된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 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KASI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장성명을 통해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2023년 9월)와 베트남(2023년 6월)을 방문해 원전, 디지털, 과학·혁신, 녹색 경제,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등 미래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리핀 FTA 서명(2023년 9월), 한·태국 EPA 협상개시(2024년 3월) 등 동남아 주요 시장과의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메콩강 유역 개발(환경·수자원·관광 등 분야) 및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등 역내 소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정상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5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니우에와 수교해 14개 태도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ODA 등 태도국에 대한 협력재원 증액을 공약해 장기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정상선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태도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행동계획으로 발표해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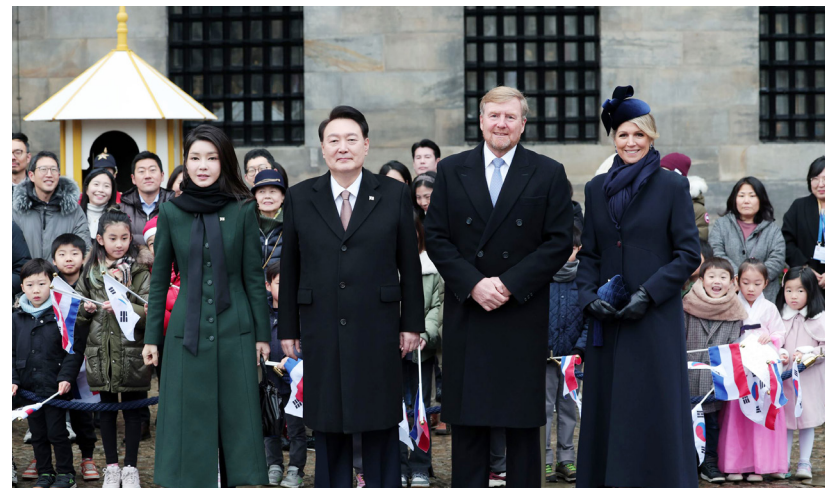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 국가인 인도와 활발한 정상 및 외교장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자 교류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3년 7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을 주재하는 등 역내 유사입장국과 연대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푸른태평양동반자(PBP)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세안과의 최상위급 관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 협력 및 포괄안보를 아우르는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호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에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상급 교류 61회(정상회담 44회, 총리회담 17회), 외교장관회담 36회 등 양·다자 계기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 다변화의 핵심축이자 주요 협력 대상이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EU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11년만에 EU 양 정상(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및 8년 만에 한·EU 공동성명 채택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7월에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 원전, 인프라, 미래협력 등 전 분야에서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에는 찰스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최초의 초청국으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해 국방안보, 경제,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공공·민간분야를 망라한 총 49개의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에는 1961년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한·네덜란드 외교·산업통상 2+2 고위급 회의체 신설, 국방안보, 경제안보, 원전 등 관련 총 14개의 협력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2022년 11월 격상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7월), 에스토니아(10월), 아일랜드(11월) 정상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NATO 정상회의(7월)에서는 발틱·노르딕 국가들과, 유엔총회(9월)에서는 수교 이래 최초로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럽내 소규모 국가들과의 가치외교파트너십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1월), 루마니아(12월)와의 방산무기 수출 계약 성사 및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주(6월) 등 방산·원전 협력 대상국도 확대했습니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정상 방문 등 고위급 교류로 더욱 강화한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에너지,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년간 대중동 경제외교에 힘을 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르를 중심으로 민간 경제사절단과 원팀 세일즈 외교를 추진해 '신 중동 특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S-Oil 2단계 사후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포함, 총 2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의 대한국 300억 달러(약 40조 원) 투자가 결정됐고, 총 48건의 약정·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3년 10월 사우디 및 카타르 국빈방문시 카타르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포함해 총 63건의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이라크와의 정상급 교류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인프라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 13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5개국, 외교장관이 3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한편, 역대 최초이자 윤석열정부 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내외 아웃리치를 적극 시행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중남미·카리브 16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간으로, 정부는 고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남미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기간 유엔총회, G20, APEC 등 다자계기 중남미 13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0월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개정했고, 2023년 7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해 제45차 카리브 공동체 정상회의의 참석 및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상·인프라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중남미 주요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통상 및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한·중미 특별라운드데이블, 한·중미 통상투자포럼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주요 장차관급 인사 49명의 참석 하에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카리브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중남미·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고위급인사 교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식량 수급 다양화,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한·페루 정상회담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아 4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수교 이래 최초 외교장관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대중중앙아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해 에너지·인프라, 공급망, ICT, 환경 등 분야별 실질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리튬광구 공동 탐사 개시, 우즈베키스탄 희소 금속 상용화 사업 착수 지원, 투르크메니스탄 선박 건조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지속 개최해 한·중앙아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중중앙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아중동 지역에서 주요 고위급과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2의 중동 봄을 만들어가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프리카간의 중장기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한바 상주공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중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위급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업, 수산,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대중남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으로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윤석열정부는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양·다자협의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여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다자 경제협력을 추진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재외공관별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하고 반기별로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2023년 6월, 12월)하는 등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유기적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협정(필라2) 발효(2024년 4월) 및 청정 경제협정(필라3)·공정경제협정(필라4) 타결(2023년 11월) 등 공급망 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교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G7 등 회원국들과 핵심광물의 추출·제련·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MSP 수석대표회의의 참석 등을 통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해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국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의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총 85개의 재외공관에서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를 지원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기업지원협의체 등을 개최해 미수금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포럼·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과 주재국 정부·주요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해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41개 공관),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 해외진출의 나침반이 되도록 했으며, 2023년 재외공관장 회의 계기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120여 명의 공관장과 270여 명의 기업인 간 총 380여 건의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모색 및 애로사항 해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양자경제협력 심화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 방미를 통해서도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으며, 양국 NSC 간 최초로 '핵심·신흥기술대화' 및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 한미 우주동맹 발전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양국 인적 교류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3월, 12년 만의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는 2024년 3월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3대(그린·보건·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투자·교역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EU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캐나다와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5월 한·캐나다 2+2(외교·산업)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광물 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희소금속·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 및 한·미·몽 고위급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등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 다자경제협력 강화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G7,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

과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복원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식량·보건·기후변화 분야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동 회의에 참석한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다자 외교간 시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국가상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평화회복 지원 방안을 공약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AI 포함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G20의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실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기여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알리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AI 거버넌스, 원자력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격차 해소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관심 분야인 다자무역체제 복원, 역내 연계성 촉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여해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기타 6개 각료선언 및 결정을 채택,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우리나라·칠레) 의장직을 수입하고, 서비스국내규제 및 전자상거래 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JSI : Joint Statement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해 세계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원·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및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 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한·투르크메니스탄 무역경제협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내실화를 위해서 지재권 중점공관을 23개로 개편하고, 2022-2023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099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개발·기후·디지털 등 글로벌 격차 극복을 위한 ODA 확대 등 우리 기여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유엔 간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술선도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군사 분야 AI에 관한 최초의 다자회의인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를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제2차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행



NATO 정상회의 참석





ITLOS 재판관 당선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AI 안전성 정상회의(2023년 11월)에 참석하고, 차기 화상 정상회의를 한영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2023년 9월) 등 계기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하고(파리 구상), AI 글로벌 포럼 개최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OECD,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등 다자협의체의 인공지능 AI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에 지속 참여해 우주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해양 규범 질서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및 국제형사정의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2023년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으며, 동 회의 계기 온라인 성 기반 폭력의 영향에 관한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인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캐나다 KDRT 귀국편 수송기에 직접 탑승해 감사를 전하는 트뤼도 총리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KDRT 복귀

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주도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4월), G7 확대 정상회의(5월), G20 정상회의(9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U와 2023년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국을 확대

####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시행국가 >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UAE, 페루, 모로코,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6개국)와 협정에 가담했고,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3개국)과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GCF 제2차 재원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공약했고,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2023년 1,200만 달러에서 2024년 1,35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마지막 제5차 정부간회의(INC-5)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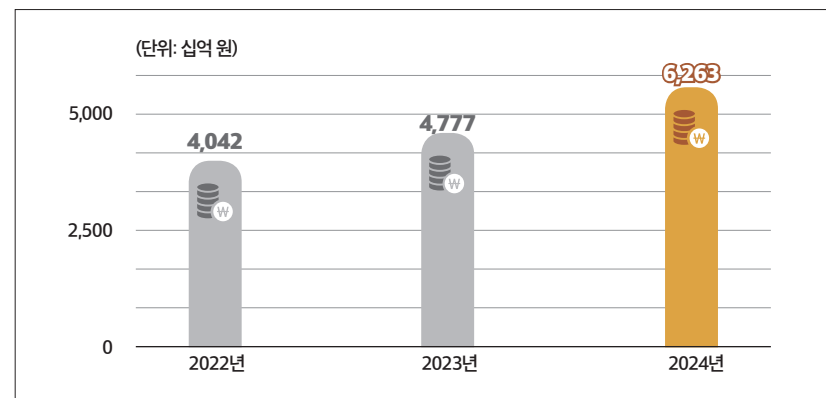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해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2024년에는 3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G7 선진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개발협력

< ODA 규모 확대 추이 >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윤석열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계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외교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3년 12월에는 한미 공공외교 고위급 협의 정례화 목표로 제1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해 한미 해외정보조작 대응 MOU를 체결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건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 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화했습니다.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당선으로 집행이사국 5회 연임에 성공했으며, 2022년과 2023년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네스코 내 주요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20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고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유산 협약의 발전 방향 모색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주요 분야에 있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분야 협력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미 공공외교협약



##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현상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대국민 해외안전정보 홍보 및 다양한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등 역사적 특수 동포와 취약동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증가, 지정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의 양상이 다각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와 위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형 재난 등 해외 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안전상황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외교부-국방부-해수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부처 간 핫라인 구축 및 유기적 공조 등 신속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단에서 군부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자 외교부(재외국민대책본부)가 주축이 되어 우리국민 대피계획 수립, 신속대응팀 및 군수송기 파견(외교부-국방부), 현지 우리국민 집결 및 우방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주수단한국대사관)했으며, 이러한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 28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정부는 현지 우리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체류자 전원에 대한 안전확인 및 안전정보 전파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10월 14일 현지 정세 악화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수송기와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163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 과정에서 일본-싱가포르 등 제3국 국민의 철수도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분야에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우리측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화답으로 두 차례(2023년 10월 말, 11월 초)에 걸쳐 우리 국민 35명의 철수를 지원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보호 관련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집트-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해 가자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을 이집트-가자지구 국경(라파)을 통해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단 프라미스 작전



이스라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그 밖에도 2023년 5월 태풍 미와르의 여파로 괌 공항이 폐쇄되자 윤석열정부는 발빠르게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임시숙소(3곳)를 확보했으며, 현지 공항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여행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대상 비상식품 공급,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신속한 출국 지원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8월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현지에 공관직원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대피를 지원했으며, 11월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감금당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주관부처로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소방청, 12월에 해양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재외국민보호 및 해외위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해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공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지원,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등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YTN·KBS월드라디오·국민일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해외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와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 ▲해외위난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의 적기 전파 및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혐오범죄-마약-해적 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3년 6월)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중략)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2023년 5월 <재외동포기본법>과 2023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 후 총 21회의 동포 간담회를 포함한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역대 정부 최초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선정된 344명이 이듬해에 국내 입국을 완료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4년 현재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현지 잔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신규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국내로 초청해 이들의 아픔을 위로했고, 파독 근로 60주년을 기념해 파독 근로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 행사 및 사진전 개최 등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인 입양인들의 부모를 찾기 위해 총 59건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했고, 최근에는 40년 전에 잃어버린 국내 거주 가족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뜻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12명의 입양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차세대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20명을 장학생으로 선

발해 거주국 현지와 국내에서 학위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1개국 1,433개 해외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해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했고, 한글학교 교사의 현지 연수 및 학위 취득과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51개국 1,307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3 세계한인 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인회장단 331명을 초청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달에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서도 지난 20년간 대회와 비교해 참가자 수 7,825명, 전시부스 600개, 상담건수 17,183건, 계약상담금액 5억 7,200만 달러 등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최다성과를 기록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는 정치·경제·법률·언론·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개국 89명의 차세대 동포가 참여했으며,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는 10개국 76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해 세계 무대 속 한인 정치인의 역할 강화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역량 결집 및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공동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국정과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민원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해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영사민원24 웹사이트 등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내국민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사업을 추진해 해외체류 국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경기 진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22년 8월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5일에는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 목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하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공격은 북한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5,600억 원에 달함
- 북한은 2023년 보안인증S/W 취약점으로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조선분야 방산 업체를 침투해 설계도면을 절취하는 한편, 외교·안보 전략 절취를 위해 해킹 메일도 지속 유포했음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케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40만

건의 위협정보를 공유해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1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국가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앞장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설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목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기조를 담아 수립됐습니다.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명시된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 ▲국가 쏘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에 대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확인·견제·차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공·일반·학생 부문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공격방어대회’(Cyber Conflict Exercise)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대구

2023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3년 7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개최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해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육군이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영국군 사이버협회(Army Cybe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훈련(DCM : Defence Cyber Marvel)’에 한-영 합동방어팀을 구성해 첫 참가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증·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습니다. 신속확인제 적용 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보보호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6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타 인증의 취득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를 통해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 등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고, 인공지능 시스템 보

안 요구사항 등 총 9건의 신규 표준화 아이টে들도 승인되는 등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3년 4월 26일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CCF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와 함께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와 세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023년 11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무대에서도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과 이행, 신뢰구축·역량 강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BIE일정(현지실사, 경쟁 PT, 심포지엄 등)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외교 지평 확대, 공급망 다변화 및 부산 인지도 제고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정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4차례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BIE 일정 대응, 대외 유치교섭활동, 홍보 등의 유치활동 및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0일 2차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프레젠테이션, 2023년 4월 3~7일 BIE 현지실사단의 부산 현지실사, 2023년 6월 20일 4차 프레젠테이션 및 부산엑스포 공식 리셉션, 2023년 10월 9일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 2023년 11월 28일 5차 프레젠테이션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식일정에 대응했으며, 다방면에서 대내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총 5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위급의 참여, 한국의 문화컨텐츠 활용 등으로 한국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파리에서 열린 공식 리셉션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역량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기념품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유치홍보 활동시 활용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BIE 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 스포츠 옥외광고(센강, 상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해외 언론 홍보,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해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BIE 현지실사단의 부산 현지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



BIE 172차 총회 계기 PT, 리셉션

로 BIE 실사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기후산업국제박람회, UN총회 등)들을 계기로 한 홍보활동도 전개했습니다.

###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관 특사를 지속 파견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정신으로,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  
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주한외교단

그 결과, BIE 회원국(182개국) 대부분과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 14일 ‘2029년 12월 조기개항 추진 로드맵’을 발

표를 했고, 2023년 8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해, 부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성과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특사, 외교장관 특사들과 민·관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 및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교섭활동을 통해 국가별 경제외교 협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과정에서 핵심광물, 건설수주, 인프라투자, 농수산협력,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절단 파견, MOU 체결, 프로젝트 발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유치교섭 과정에서 논의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이 함께 발굴한 실질협력 이슈들의 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103 제2차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 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이라는 3대 중점과 상호운영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고, 선정된 세부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합참·각 군과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14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무인체계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전력화, 상호호환, 원활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계열화하고 탑재장비를 모듈화하는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는 표준화된 무인 기체·장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생산하고, 야전 운용부대들은 모듈화된 장비를 쉽게 교환함으로써 전력조합의 유연성과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해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2023년 6월) 등 무인체계 전시회를 정부부처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3년 10월)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민간의 무인체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활용과 연계되는 핵심기술을 발굴하는 등 민군협력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방 지능형 플랫폼 1단계 구축을 2023년 12월 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운영해 국방데이터 수집·저장·가공,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분석·인공지능 모델개발 서비스를 2024년 내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 2단



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무기체계 등 모든 전장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 AI센터를 창설(2024년 4월 1일)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부는 2023년 2월에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목표와 미래 국방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국방우주전략서’를 최초 발간해, 국방우주력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2024년 4월에는 2호기를 발사했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2월에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서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방안’을 심의·의결해, 향후 국방우주사업의 보안 유지와 확대되는 군 위성발사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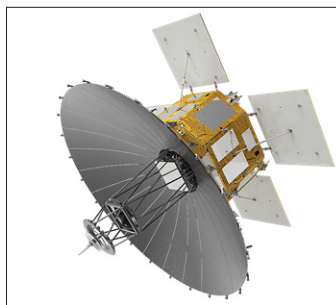
국방부는 우주위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및 국제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 결집을 위해 2023년에는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활용체계를 정립하고, 민·관·군 합동훈련을 최초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연 2회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해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협력 동향을 최초로 평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사이버공격에도 응용됨에 따라, 국방부는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최신 자동화·통합화 기술이 적용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해 작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이버전문사관의 획득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분야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軍 계약학과를 추가 했으며, 정보보호특성화대 졸업자 전문사관 선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유능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임관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핵심직위 제도를 마련하고 핵심지위에 선정된 특기자에게는 사이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 처우, 인사, 업무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 : Electromagnetic Spectrum)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전략 발전을 위해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본부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실을 사이버전자기정책과로 개편하고, 2023년 1월 합동참모본부 전자전과를 다영역작전계획과 및 다영역대응능력과로 개편해 우주·사이버·전자기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전략을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추진중입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장기간이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는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Fast Track’(신속소요획득, 시범사업 후 획득)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는 통합 소요기획 신설·작전운용성능 유연화·시험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체계개발과 양산 통합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훈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중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을 법제화했으며, 사업타당성조사 요구시기 확대 및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감소에 대비해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해 현용전력으로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해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성이 있게 추진해,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주변 민군 갈등의 증가,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 등 다양한 교육훈련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쌍방 교전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VR·AR·M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미국·영국·우즈베키스탄 등 국내외 9개팀이 참가한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개최해 우방국과의 군사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고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 1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했고 특히, 신속·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추진 트랙을 발전시키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무기체계, 신속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내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방조직 개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덟 명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기별로 핵심의제를 선정해 대통령 주관 본회의 운영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2023년 8월 8일과 12월 20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2차와 3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북 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방안’,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방안’, ‘감시·정찰(ISR)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방안’ 등 도출된 과제에 대해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에도 대통령 주관의 위원회를 통해 국방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심의·조정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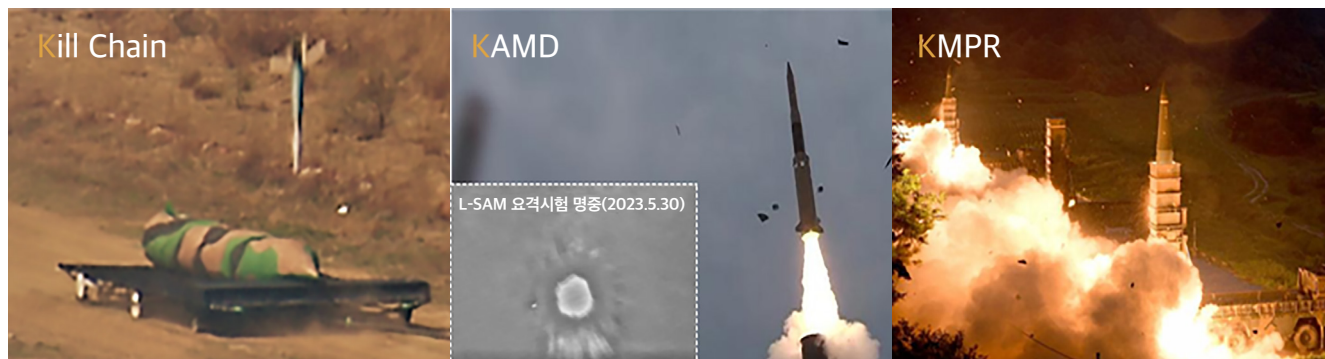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반 전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와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존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및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결심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



초정밀 타격능력 확보 (이동표적(TEL)타격)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L-SAM)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강화(현무)

### < 한국형 3축체계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반영사업 >



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II  
- 북 미사일 위협대비 대응능력 향상



②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 은밀침투를 통한 전략표적 및 고위험표적 타격 가능



③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궤도를 관통, 동시·정밀타격 가능

III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 및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 국방중기계획 3축체계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는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원으로 최우선 배분했으며,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3축체계 관련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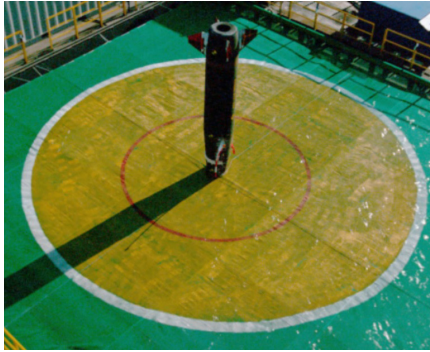
###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핵심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억제 및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이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NCG 협의에 따라 전략사령부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발전된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FS연습을 통해 최초 운용능력을 평가했으며, 하반기 연합연습에서 최종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4년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II

###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발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궤도를 신속히 제거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II를 실전 배치했으며, 그 밖에 적 장사정포에 대한 대량·집중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30mm급 다련장(천무) 및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궤도를 정밀타격해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의 양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I 등 성능이 보다 향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에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시행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합동지휘통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와 미래 전 영역 통합작전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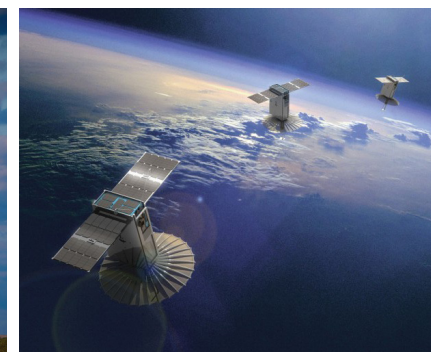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및 항공기 기반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에는 군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와 2호기(SAR위성) 발사에 성공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Kill-Chain)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상위 수준의 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우주경쟁시대의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기술 역량을 결집해 강화하고, 우주산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1·2호기에 이어 2025년까지 군정찰위성 3~5호기(SAR위성)를 추가로 발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정찰위성 외에도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의 위성을 활용해 목표를 고화질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군정찰위성과 다수의 군집위성을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한 신속한 징후감시가 가능한 초소형위성을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양산 사업을 2024년부터 착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업과 위성 및 무인기로 획득된 다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해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고 타격체계와 연계해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 생화학 테러 및 재난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성탄을 사용한 방독면-II 6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과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킷(KMARK-1)와 개인제독킷(KD-1)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협예측분석체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학·전자장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식제독기, 적 화생방 공격과 화생방 테러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오염된 장비·차량 등을 신속하게 급속제독할 수 있는 분말형급속제독제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극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병 14만 7,000여 명과 장비 7,500여 대를 투입해 재난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3년 3월 합천과 4월 강릉·대전·홍성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장병 1만 1,000여 명과 진화 헬기를 비롯한 장비 180여 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2023년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과 7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해외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해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정상외의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마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기반의 상호방위 개념’으로 격상, 미국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의 효과 발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출범시켰습니다. NCG는 북핵 위기시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걸쳐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운용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로의 획기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한미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더불어,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워싱턴 D.C.에서 4년 8개월 만에 재 개최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제4차 EDSCG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미 대표단이 해군 2함대사령부(新·舊 천안함)를 방문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북한의 핵·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2013년에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맹의 능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에 서명했습니다. 한미는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성에 대비 동맹능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북핵 억제·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년에 재개됐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합의함에 따라 7월에 전략핵잠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 기항, 10월에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최초 착륙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미는 한반도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



전략폭격기(B-52H) 청주기지 착륙

##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해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했으며, 2019년 이후 정부연습(을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하반기부터 2022 UFS 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해 모든 정부 부처가 전시지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2023 FS 연습 계기 최초로 군사연습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반영했고, 2023 UFS 연습 시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상황을 상정해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실시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확립시켰습니다. 2024 FS 연습은 한미가 발전 중인 새로운 작전개념과 방책을 연습에 적용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강화했고,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에서의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반영한 실질적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023 FS 연습시부터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해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했으며 이 훈련의 명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해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2024 FS 연습시 2023 FS 연습 대비 연합야외기동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동맹의 압도적 태세를 현시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고양했습니다.

2024 UFS 연습시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정부연습과 국가총력전 수행 연습을 병행해 우리 국민들의 북핵 대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고, 최근 전쟁양상을 고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해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 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



고 한미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됐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 차관)’를 2023년 7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해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합정사업MRO(운용정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해 국방부차관과 실시한 회담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협의체 구축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미 POST콘퍼런스에서 첨단전력기획관과 미 연구공학차관 간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혁신단(DIU)을 방문해 과학기술 협력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한미는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했으며, 조건#3과 관련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합참의장회의(Tri-CHOD)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고위급협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을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11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개시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2023년 11월에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기존의 3자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항에 기반해 다양한 영역의 3자훈련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협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해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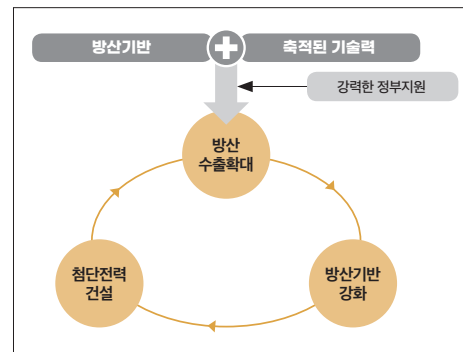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해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주요국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여해 유럽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2023년 Seoul ADEX 개최 시 전 세계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가해 240억 달러 이상의 수주상당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 실물기체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하고, 민군겸용기술의 접목체인 AAM과 소형 우주발사체 등을 전시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 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해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설비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유도무기·기동전력·함정·경공격기 등 주요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해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K-9 사용자클럽 간담회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급식 폐지 및 지역상생장병특식 최초 시행과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해 장병 급식·피복 만족도가 향상했고,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실시했습니다.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무급식 품목이 없어짐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병 중심의 급식 운영을 위해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1인 1식 1만 3,000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식'의 확대시행(2023년 연 9회 → 2024년 연 14회)으로 급식을 통한 장병 복부만족도 향상과 부대 주둔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을 선정해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해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를 통해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해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외교부의 현지 방산수출증점공관과 합동해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회의를 출범하는 등 정부부처간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무기체계별 운용국 대상 수출 후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업체·군과 협력하여 '사용자 클럽(User Club)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매 희망국의 금융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2년 역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수출액을 유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방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위사업청·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출연기관(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해 기존 체결국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추진전략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 법·제도 영향성, 미국 국방조달제도 및 국내업체 진출사례, 체결 이후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 분석, 체결효과 극대화 방안 등 내실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심도있게 조사·분석했으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는 한·미 국방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양국 제도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국내 방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한·미 동맹진화적 발전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의 병영생활관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명)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해 총상·폭발상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민간인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및 입원치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나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함정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했으며, 군병원 간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에서도 정확한 판독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군외상센터



함정 원격진료

###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21:00), 휴일(08:30~21:00)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부와 달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이나 미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입영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전체 입영계획인원 중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입영인원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입영자가 특기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자격·면허 등이 없더라도 적성·흥미에 맞다면 해당 특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2개 특기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병역과 진료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한 병역진료설계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총 8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2025년까지 5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챗봇을 활용한 채팅상담 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행정·교육·정비 등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시설관리·청소·조리 등의 분야는 공무원 근로자를 보강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후 확보된 시간은 운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설관리원·청소원·민간조리원 등 공무원 근로자 활용이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부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으며, 특히 장병 복무여건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정어연진 강군

###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

- 최근 여러 가지 국내외 안보환경과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북한 정권이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꾀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교육자료는 우리 장병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정신자세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견지하여 격 도발시 즉·장·급 원외 하에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임.
- 각급부대는 대(대)장급 지휘관 책임하에 전 장병 대상 교육 및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 정신전력원  
DEFENSE MENTAL-FORCE ACADEMY

##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휘관 교육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ROKA 70초 영화제, PT챌린지, 해군 안보현장 체험 및 필승캠프, 공군 초급간부 자긍심 함양 교육 등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2월, 정신전력 담당 부서인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 정책과’로 변경하고 과장 직위를 일반 공무원에서 정훈병과 육군 대령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공보정훈’에서 ‘정훈(精訓)’으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정책과와 문화정책과를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군 협력하 정신전력 강화 Think-Tank를 구축하고 국방정신전력원 등 정신전력 담당기관 및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개국 수준의 국방홍보원 혁신을 통해 국방매체를 활용한 국방홍보와 정신전력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및 국방정신전력원과 협업해 정신전력 강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탑재해 MZ세대 장병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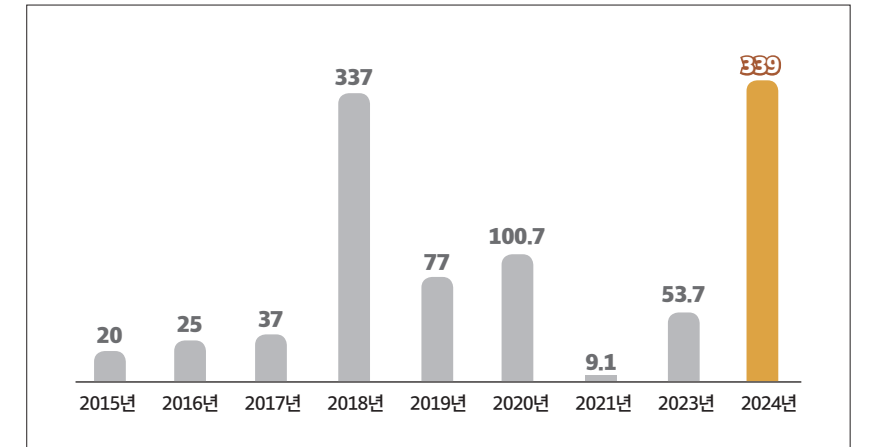
향후 집중정신전력교육 및 초빙교육 등 2025년도 정신전력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건의함으로써 정신전력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국방부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산재된 소규모 주둔지를 통합·재배치하고, 민군상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군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관내 5개 부대를 통합 이전하고, 이와 연계해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군복합타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지역 이외에도 도심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민군복합타운 프로젝트 대상지를 추가 식별하고 민군복합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필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하에,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황(단위: km²)>



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53.7km²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고 2024년에는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중 역대 최대 339km²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국민 불편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1만 5,000명에게 1,177억 원, 2023년에는 42만 4,400명에게 1,17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금액 기준 조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4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인상(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2024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고	+40,000 (6.7%)	+120,000 (17.7%)	+200,000 (25.0%)	+250,000 (25.0%)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2023년 12월에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신설했습니다. 국방부 내 모든 기관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공무원근로자 채용에 지원할 경우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점부여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



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GP/GOP, 해강안 경계초소, 함정근무자 등 24시간 현행작전임무를 수행하는 2만 여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주거환경을 고려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했으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습니다.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4,107억 원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되는 관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후 28년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1억 8,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해 전투기 조종사, 군의관,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겠습니다.

## 군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20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 군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조사·수사 입회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등 군 조사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대상 군인권보호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터넷으로 상담 및 진정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군인권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 인권 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1년 9월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인사 및 법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1303) 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신규 배치해 일과 이후 또는 휴무 중이라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 : (2021년) 67.2% → (2022년) 67.8% → (2023년) 68.2%  
(2023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5.0% 인상해 2년 연속 5.0%대 보상금 인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및 만 75세 이상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해 고령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해 유공자 생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서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른 고령화를 겪으며 의료·요양·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6세(6·25참전 91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개편하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2024년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 원에서 2024년 4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본인의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해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2024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만여 명이 생활조정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2024년 (노인 수급자)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청인이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받게되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은 2021년 518개소에서 2023년 말 702개소로 확대했고, 2024년도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인 920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재건축 및 재활센터 건립 등 보훈병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훈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사업을 올해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훈대상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고 2023년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11만여 명,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의 고령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6월에는 그 동안 15종으로 나



국가보훈등록증



##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국제사업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황기환 지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됐다” 긍정 31.9% < 부정 42.1%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제보훈장관회의 등을 거행하며 대한민국 70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동맹국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 국내·외캠프, 6·25전쟁 관련 역사교육자료 발간 및



국립연천현충원 조감도

뉘어진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해 이천·영천·임실·괴산·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으로 2026년까지 총 18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강원권 및 2023년 8월 전남권 호국원 입지 선정을 통해 4만 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장능력 확충 및 유족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되는 국립묘지는 안보 교육 및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주간에는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통한 취업교육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AI 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4년 3월 완료돼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유엔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제복의 영웅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활용을 논의하는 참전국 역사·사회교사 학술모임인 월드콩그레스 등을 실시해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송출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을 고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과 11월을 '제복근무자 집중 감사운동' 추진 달로 정하고, KBS 불후의 명곡, 채널A 강철캠프 등 인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공익광고 송출 등 범국민적 감사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에게 맞춤형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발 등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년 3·1만세운동 참여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에는 17만 명, 올해 '대한민국 만세대전'에는 18만 명이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했습니다.

2023년 12월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립묘지 관리를 보훈부로 일원화해 통합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이관을 넘어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하고,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2022년에는 유럽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되어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를 봉환하며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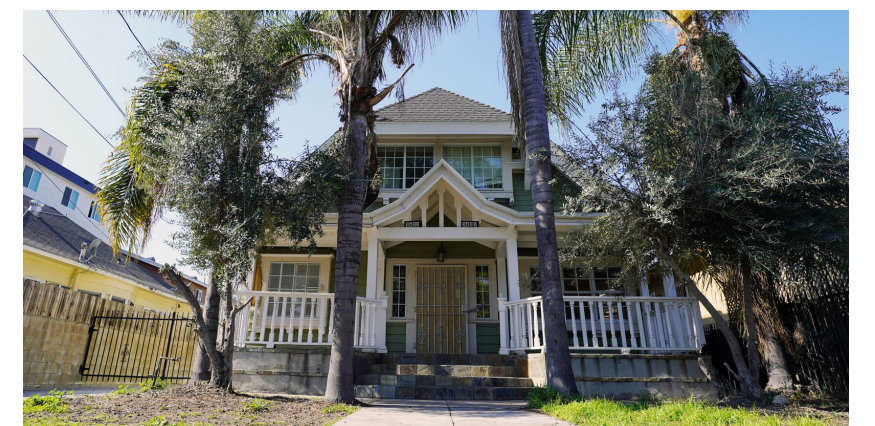


최재형 선생 봉송식

또한, 2022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2023년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민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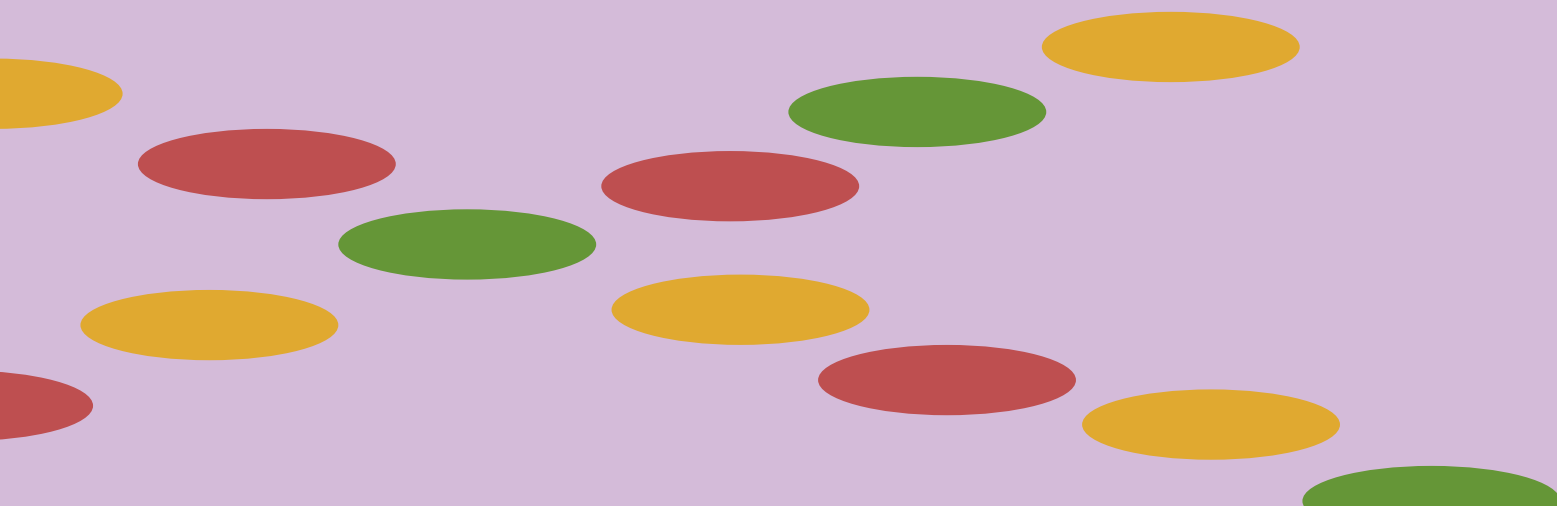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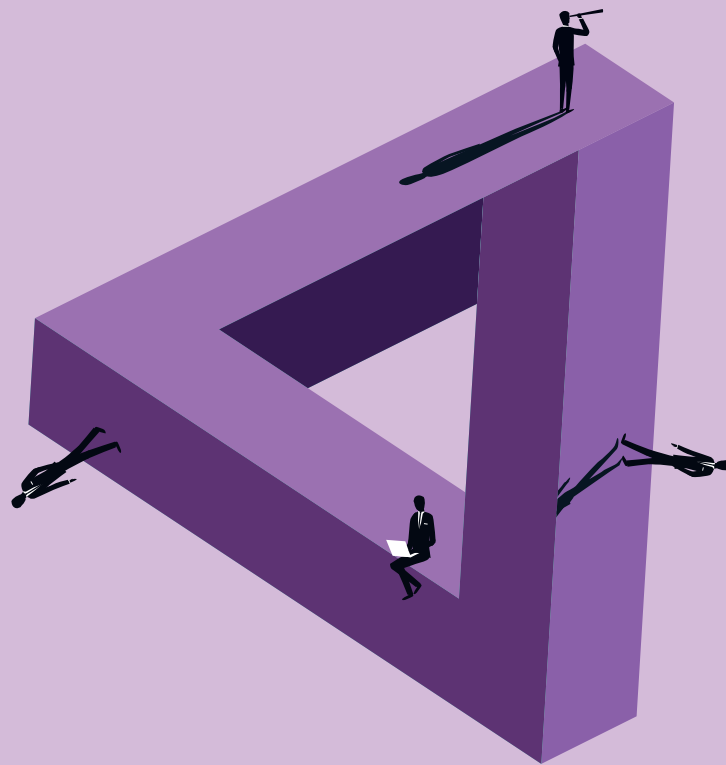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홍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윤석열정부의 노력으로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금번이 최초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2025년 광복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이태준열사기념관은 향후 한-몽골 우의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 홍사단(단소)





#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권한 확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자치조직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육·산업·고용 등 6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2월 10일)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등의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핵심 권한의 이양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등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된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운동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 등 7개 사무 특례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조례 우수사례

(43개)를 선정·공유(2023년 10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법령을 발굴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10월 27일)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의결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2022년 16개, 2023년 147개). 더불어 인구 규모에 따라 규정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마련해 같은 회의에서 보고·의결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신속히 의결사항을 반영해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랑)’을 구축(2022년 7월)했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기능 개선(2023년 12월)을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절차를 온라인 윈스톱 서비스로 실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2024년 3월 19일 공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구성 형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주민 대응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개선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현장,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4월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 논의를 했으며, 자치단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치단체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단체별 현황조사 등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는 ‘제주·강원·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현장 방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취약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억과 특별교부세 164억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의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자치단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전국 시·도 교육부서 담당자 대상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교육부·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무 연계 사항을 발굴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에 따른 정책 분절을 해소하고 행·

재정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5월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분야 규제완화와 실질적 분권을 보장하는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위임사항 13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분야의 권한이양 특례를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위임사항 14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30건)를 담은 제주특별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보정기한 연장을 위해 세종시법도 일부 개정해, 인구증가·대규모 기반시설 건립·학교 신설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정책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조직원·인사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2023.6.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2024.1.18)

##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는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약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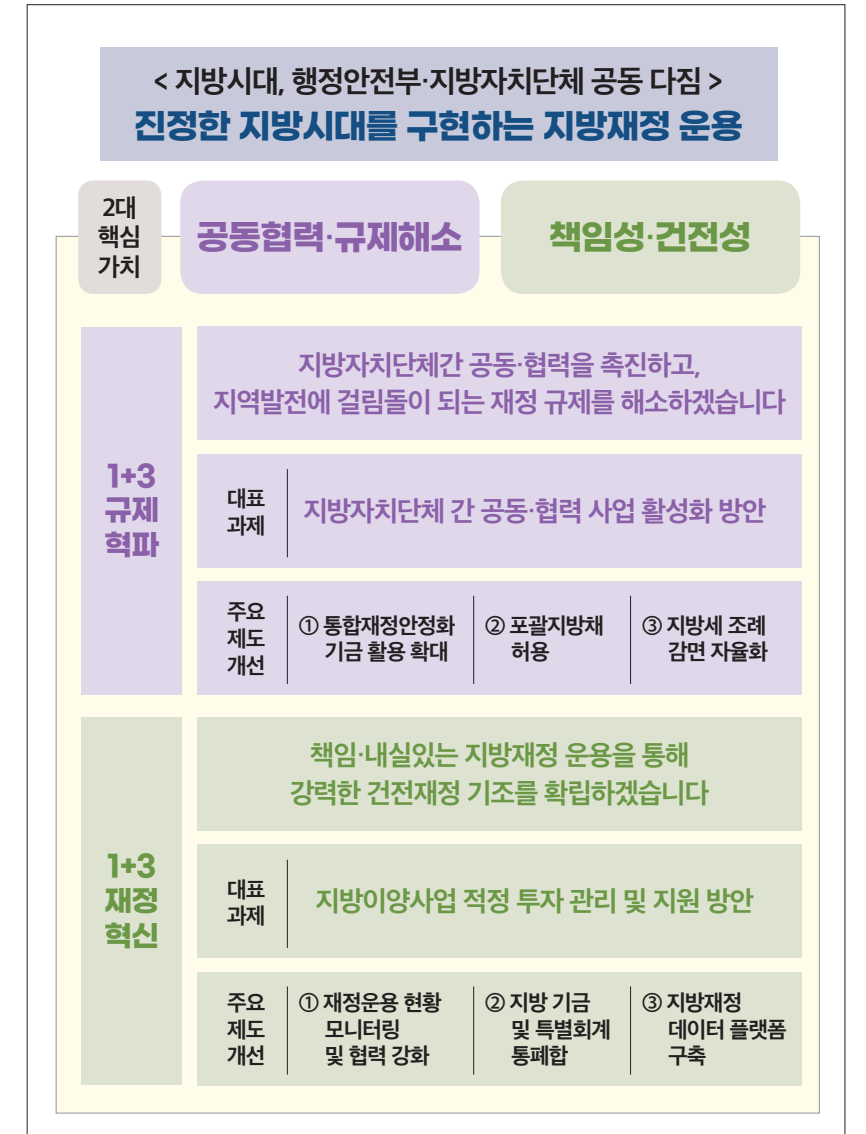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사업, 지방채무 및 보증채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 비중(2015년 → 2022년) : (인구) 50.6% → 49.3%, (GRDP) 49.9% → 47.5%, (취업자) 50.2% → 48.4%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 원)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3 → (2023년) 33.3 → (2024년) 34.4
- 지방채무(조 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 (2022년) 38.3

###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책임·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초 확립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했습니다.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3년 10월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 및 연륙도서(連陸島嶼)를 지원하고, 수온상승 등에 따른 어업 피해 지원소요를 뒷받침 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수요를 신설하고, 인접지역간 공동·협력사업도 남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하도록 관련 지원 기간



도 각각 3년 연장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2배 확대하고,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시 조례감면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활력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확충했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이상 확대(총 13조 6,651억 원)해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전년 대비 13개 확충(총 37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10%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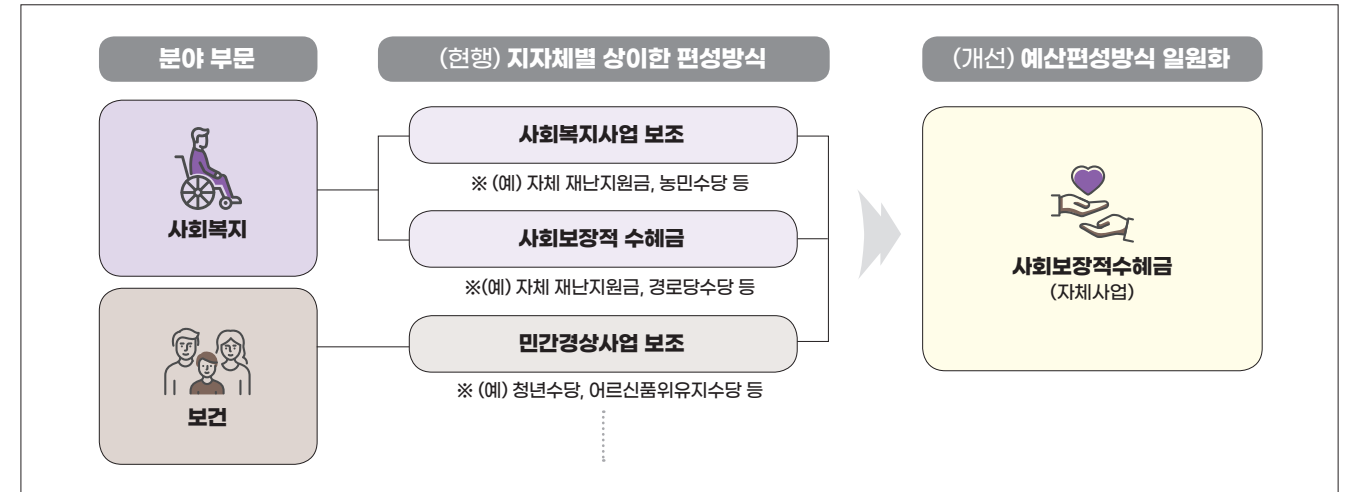
###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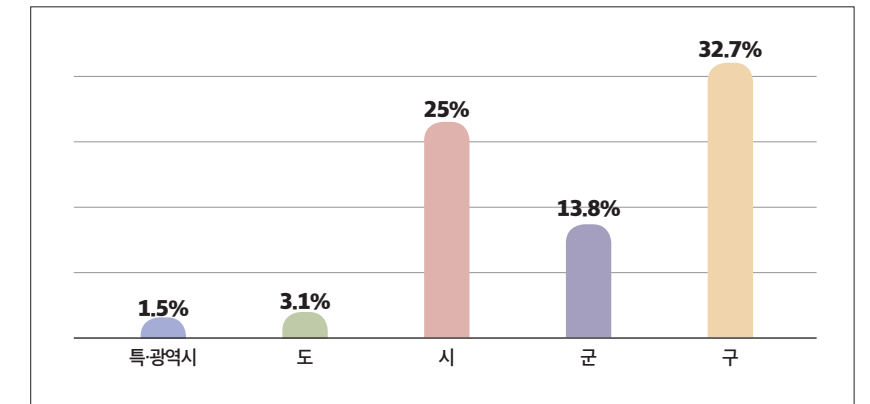
기존에는 243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지방재정 365'를 통해 현

금성복지비 편성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2023년 전체 예산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 >



###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분석 개선

최근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탐e) 개통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정부는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2023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혁신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를 거쳐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선정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12회) 및 부총리-지자체장-교육감 간담회(15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대통령 말씀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2024년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셋째,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업무 전 과정의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 10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의 강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지방채무는 약 38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채무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도 외로 100% 인정하던 차환채 인정비율을 2024년에는 80%로 축소했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2025년 50%, 2026년 30%).

둘째,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민간 등과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약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공정한 협약 체결을 예방했고, 우발채무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해 확정채무 전환을 방지하는 등 향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노력은 2023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1,000~1,600cc) 구입이나,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국민 약 500만 명이 부담하는 연간 4,260억 원 규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대학 연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2022년 12월)’을 제공해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RISE 체계구축(전담부서 정비·전담기관 지정), RISE 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생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9개)’를 지정해 조성중이며, RISE 시범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기업 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3회) 및 워크숍(2회)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10,529명 중 이전지역 인재 1,859.75명(17.7%)이 채용됐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30%) 적용 대상인 2,43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990명(40.7%)이 채용돼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 최근 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

구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신규 채용 (전체)	11,087명	6,935명	4,152명	14,464명	6,957명	7,507명
① 지역인재 채용	2,549명(23.0%)	763명(11.0%)	1,786명(43.0%)	2,757명(19.1%)	892명(12.8%)	1,865명(24.8%)
② 거주지 제한 채용	4,755명(42.9%)	1,311명(19.2%)	3,424명(82.5%)	1,586명(11.0%)	234명(3.4%)	1,352명(18.0%)
③ 지역인적자원	8,689명(78.4%)	4,911명(70.8%)	3,778명(91%)	9,089명(62.9%)	3,690명(53.0%)	5,399명(71.9%)

※ 지역인재(광역) : ①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교(고졸자의 경우) 출신자  
거주지 제한 :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지역인적자원 : ③ = ① + ② + 기타(전국모집 결과 지역인재 또는 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

- 최근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신규채용결과, 지역인적자원은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은 91%, 지방출자출연기관은 71.9% 비율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국가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30%인 점을 고려 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인적자원 채용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신장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 규제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이·통장 처우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구기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우수사례(2022년 94건 심사 16건 선정, 2023년 88건 심사 17건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차관 주제 토론회(3회), 우수기관 인증제(2022년 17곳), 우수자치단체 선정(2023년 광역 12곳, 기초 21곳)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급으로 규제혁신을 독려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는 우수조례 30건을 선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손쉽게 입법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2022년 7월)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종합지침서인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년 9월)와 법제처의 주요 자문 사례들을 모은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2023년 9월)'을 발간·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한 자치법규에 관한 상담·자문 등 법제지원을 자치단체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 평가**  
- "시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보물단지 책"  
-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책으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권하는 참고서"

해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예산 51억 원, 사업기간 2022년 12월~2023년 12월)을 추진했고,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안내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범위를 확대했고, 2022년 8월에는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부터는 감사원이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연 1회 → 3회 이상)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전컨설팅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발굴·개선 프로세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참여제도 운영현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주민e직접')을 통한 온라인 주민조례청구(2022년 1월), 주민투표청구(2023년 4월), 주민감사청구(2023년 7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2024년 2월에는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면서,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시·도 150 → 200만 원 이내, 시·군·구 110 → 150만 원 이내)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3개 지표(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조사 처리 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장행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인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4년 시행 목표)을 마련했습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감소,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안정적인 연계·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인 2023년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컨설팅은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2024년 2월에 규약안 행정예고를 하는 등 연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희망권역의 여건 및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인구감소 및 인구·산업·자원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조합에 행정기관 코드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이행력을 갖춘 ‘공공협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지원을 거쳐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연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 중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윤석열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정 통합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2023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7,000억 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260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지역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의 지방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5개 지방투자기업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7,471억 원의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260여 개의 지역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2023년 한해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분야 총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업종 12개 기업에 국비 743억 원, 전기차 업종 7개 기업에 국비 271억 원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투자가 활발했

협력회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 및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6회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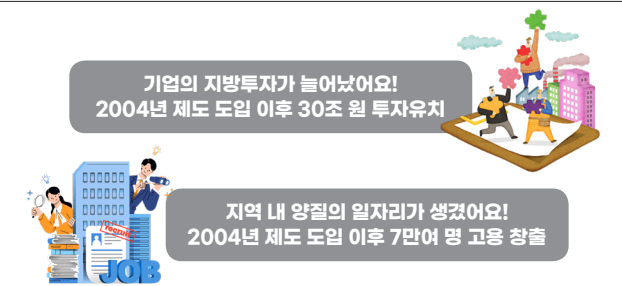
그 외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19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해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고, 자치단체 상호 간·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이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확보 기제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지방 및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 < 기업의 부담 경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개기업 국비 2,051억 원을 지급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약 2조 7,471억 원, 신규 고용 3,260여 명 창출효과 기대





< 2023년 업종별 지원현황(단위: 개·억 원) >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전기차	식품	기타	계
지원기업수	6	2	6	12	7	6	16	55
보조금	246	66	106	743	271	255	364	2,051

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보조금 지원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했습니다.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가 작아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그 내용이며, 고시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부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 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 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습니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가산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지방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정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된 바, 이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구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정기적 공모일정을 따르는 대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 유치, 기회발전특구계획 수립 등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역의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12개 상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계획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오피스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및 지역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총 15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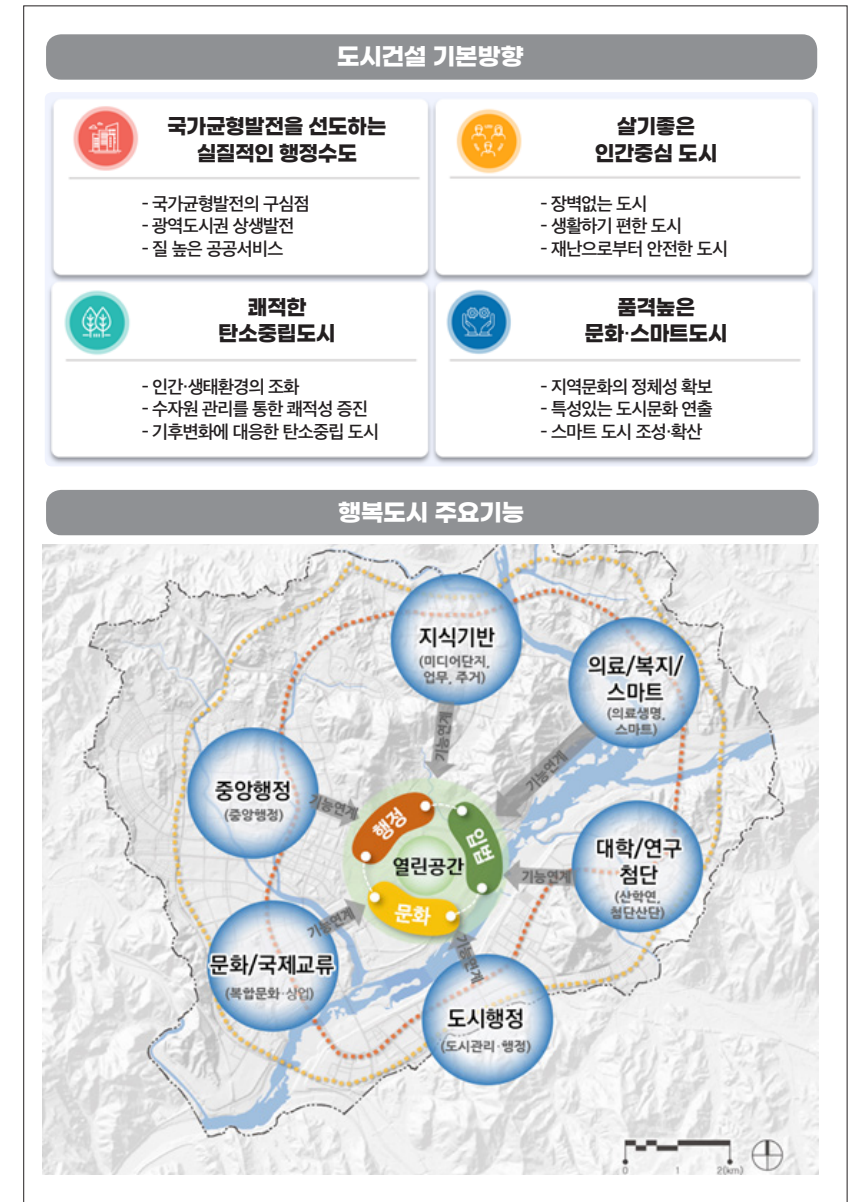
###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 원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0월 제정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캠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이며, 2023년 11월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초기 설립·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여 간 전문가 간담회,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2006년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 조성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



또한, 2022년 12월 행복청과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광역권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3개(기관 통폐합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50개)를 이전했습니다.



##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담당할 '창업중심대학' 3곳(한남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을 지난해 추가 선정했고, 지역의 엔젤 창업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2023년 동남권(경남 창원)에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중기부 핵심 정책수단을 지원하는 '레전드50+ 프로젝트'를 중앙-지방 협업으로 추진(2023년 10월~)하는 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는 커지는 추세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혁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 운영을 통해 2년간(2022~2023년) 727개의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5,370개사)을 발굴했고, 110여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7,56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기업의 70% 이상(525개사)을 지역 창업기업으로 선발해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부터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창업기업까지 집중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창업열기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신규 대상지 2개 대학(단국대, 부경대)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첫번째 캠퍼스혁신파크인 한남대학교 산학연혁신허브의 준공(2024년 12월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해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493개 기업에 총 40억 원을 지원했고, 혁신도시 내 소규모 기업의 입주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5개소에 시설 및 임대료 등 약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을 위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해 2023년 3월 부산(한국해양대)·전남(동신대)에 각각 혁신융합캠퍼스를 개교했습니다. 2024년 9월 예정으로 대구(대구한의대)·전북(전주기전대) 2곳에 추가 조성 중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한양대학교(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신파크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구축 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장비(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를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완료와 함께 청주대학교(에너지융합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와 극동대학교(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가 이전했으며, 2023년에는 광주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준공과 함께 전남대학교(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도 이전했습니다. 현재 17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난 2년간 3,97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752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말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해 산업직접법을 개정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을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확정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대책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드(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스마트공장·창업성장·혁신마우처·수출마우처·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기업·산업 침체로, 비수도권의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기업 브랜딩 및 성장모델\*을 구축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시·도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 지역스타기업 1000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 초광역권 선도기업 20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간 협력과 협업을 주도할 대표기업으로써 2024년까지 10개사를 추가 선정(총 20개사)하고, 2027년까지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및 R&D기획·제품고급화·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협업 추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계획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10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3개 지역이 신청했고, 2023년 4월 충남 부여군, 충북 괴산군 등 최종 12개를 선정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에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2024년 1월에 공모해 2023년 보다 10개 증가한 22개 기초지자체를 예비 선정하고 2025년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3년 지역혁신 공모사업 선정 지역 >

구분	지자체명	구분	지자체명
1	충남 부여군	7	강원 홍천군
2	충북 괴산군	8	전남 곡성군
3	충북 단양군	9	전남 해남군
4	부산 서구	10	강원 강릉시
5	경남 의령군	11	강원 평창군
6	전남 함평군	12	충남 보령시

###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확대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경남 창원에 구축하고 지역 투자자 발굴, 창업자-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역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투자자 및 스타트업 발굴, 엔젤투자 밋업, 포럼 및 광역권 통합IR 등 창업자-투자자 연계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92개 기업에서 937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도 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1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자금이 비수도권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마중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성해 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 687억 원, 지자체 255억 원 등 1,375억 원 규모의 모펀드 증액을 통해 자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약 5,8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4년에도 지역혁신 벤처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자금 5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확충(70 → 77개 센터, 2022년 7월)했으며, 일부 지역본부에만 있던 금융

전담부서를 전 지역본부(7곳)로 확대 설치(2023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 2022~2023년 총 26만 소상공인에 6조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직무 신입직원 채용 등 신규인력을 충원(2022~2023년 47명)했고 수준별 맞춤형교육을 지난 2년간 25회(2022~2023년 1,207명 이수)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도 신규 심사인력 확충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77개 지역센터에서 별도 서류 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창구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12월)2개 지역센터 시범 설치·운영 → (~2024년. 上) 77개 쏠지역센터 설치·운영

###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지자체와 함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로 반영돼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거점 육성 고도화 및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년 12월)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에 확정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오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를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고 협의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청취하고 지방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했던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이 5년(법정 최대기간)간의 지원 끝에 정상적으로 지정 만료됐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7.5까지 하락한 바 있으나, 지정만료 시점 직전 5개월간 평균 BSI는 92.0로 지정시점 대비 93.6% 증가하는 등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됐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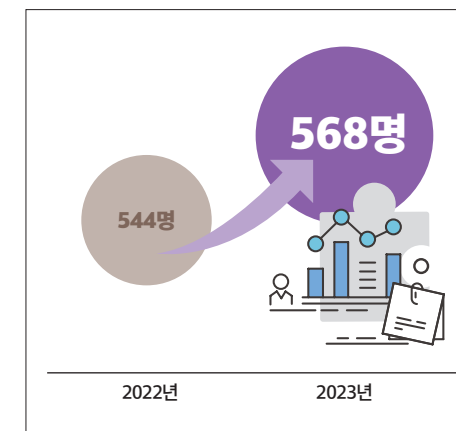
###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3년 윤석열정부는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위해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반영해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개편했고, 2기(2023~2027년)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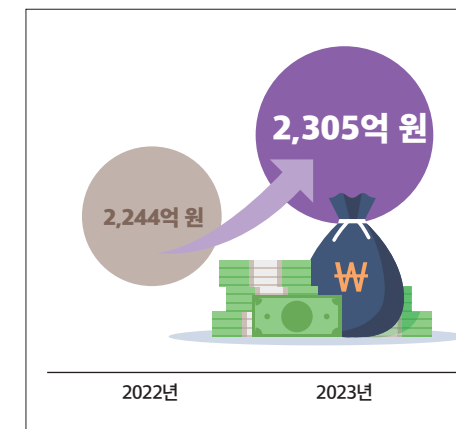
2023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약 939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568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305억 원의 사업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간, 혁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성장정책으로

< 혁신클러스터 순 신규고용 창출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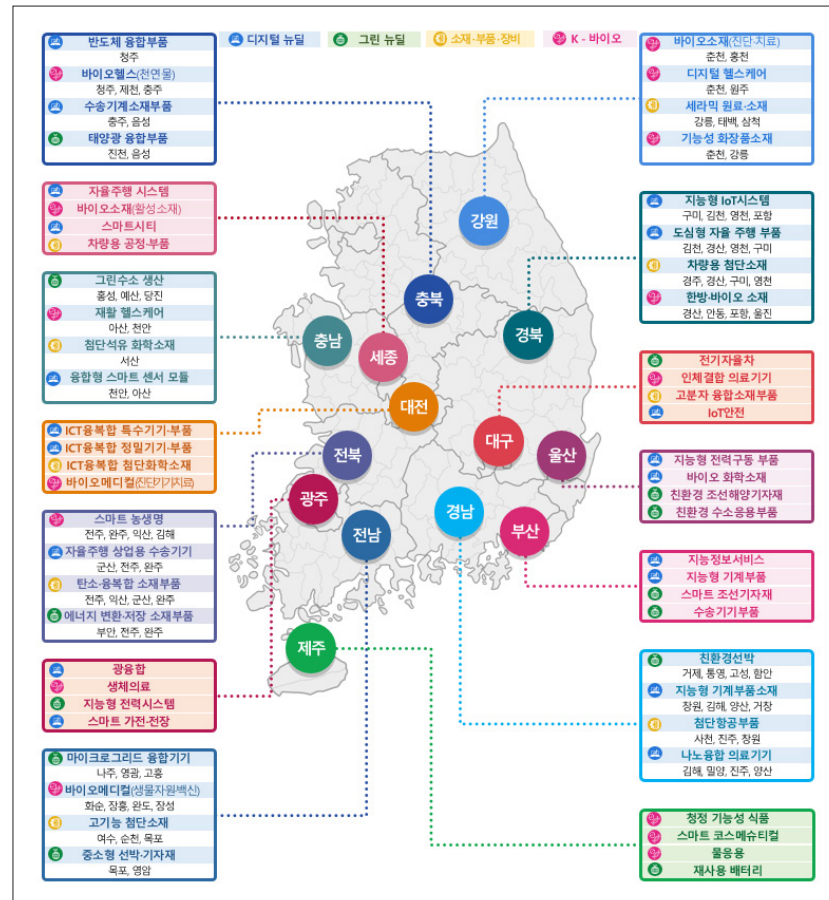


<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매출액 성과 >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00개의 지역 산업거점을 선정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며,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장비확충·기술 지원·전문인력양성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2,883억 원(국비 1,608억 원, 지방비 1,275억 원)을 지원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146.6억 원, 신규고용 832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7개의 지역 산업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형의 인프라와 특성화된 지역 역량을 결합해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윤석열정부는 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재구조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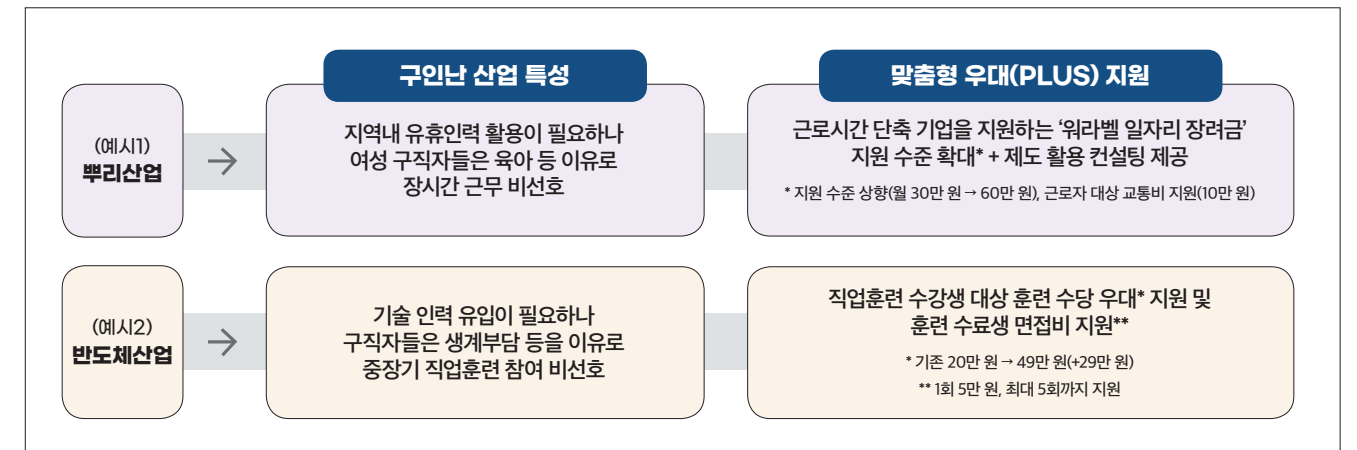
먼저, 빈일자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조선·뿌리 등 지역의 빈일자리 업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빈일자리 업종에 필요한 근로자들이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조선업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각각 100억 원, 41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 등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빈일자리가 10개월 연속 감소(3~12월, 전년 동월 대비)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우대 지원 예시 >



“현장의 목소리” 고용부 차관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대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을 추진해, 1일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드 10개소 조성, 청년마을 24곳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3%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로컬브랜드 사업,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업 트랙(2022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사업화 트랙은 최대 4,000만 원, 협업 트랙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대변하듯 2023년 사업화 트랙 경쟁률이 17.5:1, 협업트랙 경쟁률이 22.3:1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아한 형제들, 롯데월드 등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개척·확보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아놀자, 우아한 형제들, 한라산, 롯데월드 등 4개사와 21건의 협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롯데월드, 우아한 형제들 등 2개사와 6건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7개 선정해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갖춘 예비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체험학습 등을 지원했습니다.

#### <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사업화, 협업과제) 선정기업 지역별 현황 >

구분	강원	수도권	영남	제주	충청	호남	합계
사업화과제	14개	20개	20개	15개	15개	16개	100개
협업과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12개
합계	16개	22개	22개	7개	7개	18개	112개

##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2023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충남 공주, 전북 군산, 인천 중구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했으며, 4개의 로컬브랜드 팀에게는 사업화 및 골목 브랜드화, 홍보, 프로젝트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 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팀과 지역기업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개최 등을 추진했으며 전북 군산시는 팝업 행사를 통해 일 평균 방문객을 300명 유치했으며, 인천 개항로 상권의 경우 마계 페스티벌을 통해 1일 방문객이 1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 <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주요실적 >

<b>인천 개항로</b> - 마계 페스티벌 1만 명 참여로 상권활성화 기여 - 로컬브랜드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추진	<b>서울 이태원</b> -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여 - 헤리티지 브랜드 BI 및 특화상품 제작
<b>공주 제민천</b> - 지역 거점 레스토랑을 구축해 창업자 교육 - 제민네로 페스타 개최 - 제민천 도시 포럼 및 성과보고회 추진	<b>군산 개복동</b> - 양조장 구축 및 교육 공간을 통한 창업자 교육 - 군산팝업워크를 통한 지역 축제 운영

###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크를 위해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로컬페스타를 개최(5회)하고 전국 통합 컨퍼런스를 개최(1회)해 권역별·권역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로컬크리에이터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아이템 전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발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코워킹 스페이스·보육공간·스튜디오·작업공간 등이 가능한 직주락(職·住·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2023년에 충남 아산, 세종 조치원 등 2개소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권역별 로컬페스타 개최 현황 >

권역(주관)	일시(장소)	내용(안)
수도권(경기센터)	12월 7~8일(DDP)	【가자, 라이프코너(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IR 피칭 결선, 토크콘서트,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등
충청권(세종센터)	10월 19일(스틸마스프링)	【콘크리트 CON-CREATE】 - 로컬 관련 포럼, 아카이빙, 네트워킹 전시 등
호남권(전남센터)	10월 26~27일(여수 박람회장)	【로컬, 오히려 좋아】 - 로컬공연, 전시, 컨퍼런스 IR 피칭, 네트워킹 등
강원권(강원센터)	11월 15~16일(신디자인랩)	【지각 : 강원로컬의 오감】 - 로컬 팝업 레스토랑, 로컬브랜드 전시, 네트워킹 등
영남권(경북센터)	11월 23일(무영당)	【지역 헤리티지에서 재탄생한 로컬복합문화백화점】 - 로컬 인사이트 특강, 문화공연, 네트워킹, 등
제주권(제주센터)	11월 30일~12월 3일(신화월드)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새로운 원을 만든다】 - 로컬브랜드마켓, 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구성원(자치단체, 주민 등)이 주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로 지역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10개 지역을 지원한 결과, 개성있는 매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조성하고 있는 장수군(인구감소지역)은 2023년 국제 트레일대회를 개최해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지역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체류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24곳에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간 총 3,616명이 참여, 1,098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희공간

<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10개소 현황 >

**인구 감소지역**

**강원 춘천시** .Made by 약사천  
로컬메이커(약사천 특화상품) 기반 활성화  
→ 2024년 2월 2만 5천명 방문, 1천 1백만 원 매출

**전북 장수군\*** .트레일빌리지  
지역 70% 산지를 트레일특화지역 조성  
→ 트레일대회 1만 5천여 명 참석, 이미지 구축

**광주 서구** .피지컬발산마을  
언덕마을을 건강특화지구로 조성  
→ 침체된 지역 활력 및 주민만족도 제고

**전남 곡성군\*** .뚝방마켓 빌리지  
독특한 플라마켓을 마을로 확장 활성화  
→ 2023년 방문객 9만 6천명((2022년 대비 2배), 3억 원 매출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생산지  
로컬크리에이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빈 골목에 로컬크루 5팀 입점

**충북 충주시** .We,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방문자 2배 증가, 2개 신규 창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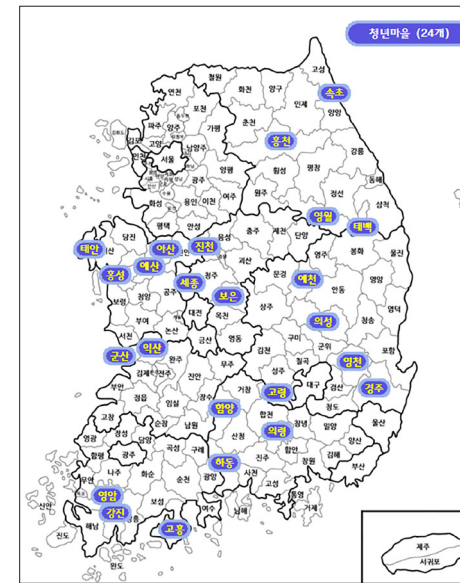
**경북 구미시** .슬로우 북라이프, 금리단길  
독서문화 기반 활성화 → 책 테마거리 조성 등 책문화 형성

**경북 청도군\***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귀촌인, 대구 접근성 활용, 귀촌 활성화 → 유동인구 5% 증가, 신규창업 2개소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지역 단절요소(폐 역사)를 개방해 활성화 → 평일 1일 방문객 1천여 명, 감성핫플로 안착

**제주도** .김녕, 해녀마을  
독특한 해녀문화 기반 특화로 지역개성 강화 → 해녀사업추진체계 및 마스터플랜 마련

< 2022~2023년 청년마을 선정 지역(24곳) >



241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선도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페스티벌(2023년 10월), 로컬브랜딩 성과공유회(2023년 12월) 등을 개최하고, 자치단체·전문가 로컬합동포럼(2023년 8~9월, 울산) 및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컨퍼런스(2023년 11월) 등을 통해 다양한 로컬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사회에서 보유한 다양한 역사, 문화, 산업자원 등을 활용하도록 해 그 도시에 특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쇠퇴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국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15개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에는 총 국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16개의 사업 선정됐습니다.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화를 목표로 영상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과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전통 목공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해 현대화해 목재특화도시로 브랜드했습니다. 남원에 산재한 풍부한 목재 인프라(옷칠공예관, 목공예연구소, 남원제일고 목공예과, 목재종합집하장)를 활용해 전통 목재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체 플랫폼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남 합천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



##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시행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도 개최해,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제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 (deadcross)’에 진입하고 국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인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0년 50.2%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12월)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 2024년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6월) 및 그 시행령(2022년 12월)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국가와 각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수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 중이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더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2024년부터는 산정 지역을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 지역 인구특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지원합니다. 2022년 처음 배분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기금의 배분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한편,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등 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민간과의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정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단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는 펀드 출범과 함께 2개의 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 경북 구미)가 소개됐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 :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 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 원 규모)** :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2만 명으로부터 약 6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했으며, 많은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열악지역으로 모였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금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생겨진천 케어 팜 공동체 텃밭 운영’은 대표적인 기금사업 사례입니다.

- **재정자립도별** : 20% 미만 자치단체 3.35억 원 (약 1.9배) vs 20% 이상 자치단체 1.74억 원
- **인구감소지역** :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8억 원 (약 1.9배) vs 그 외 154개 자치단체 평균 2.0억 원



한편, 올해 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2024년 2월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는 자치단체의 모금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현재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편과 객관지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지표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기존 나열식의 객관지표를 사회와 경제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영역별 세부지표를 개선해 핵심·객관·주관지표 간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기에 지역인구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인구부문을 사회부문내 신설해 관련 지표를 신규 반영했고, 경제영역 내 지역 산업·일자리, 생산·분배, 물자·재정 부문을 신규로 구성해, 관련 지표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지역통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개발,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체계 구축 및 개선된 균형발전지표의 활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정·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2023년 7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분절 추진되어온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법정계획, 주요 시책 및 과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일자리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2023.7.10, 세종)



지방시대 선포식(2023.9.14, 부산)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발표했습니다.(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 간담회와 시·도·부처 협의회 및 주요사업 설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앙·지방정부 등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약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시도 의견 수렴, 소관부처 검토,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반영·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최초 사례로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위원회 내 전담부서인 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고, 지역공약과제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 및 예산 반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도 개최(총 5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지역발전에 긴요한 지역정책 과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를 운영(7회 개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지역정책과제 전문위 회의



위원회-17개 시도 협의회



시도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도 협의회(9회) 및 시·도별 순회 의견수렴(14회)을 통해 관련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새롭게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전시, 콘텐츠를 제공했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역산업 유관 기관 관계자·시민·청년·교육계·기업인 등 대국민 대상 지방시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과 시·도관, 정부부처관 등을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고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해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 지방시대엑스포(2023.11.1~3, 대전컨벤션센터)

